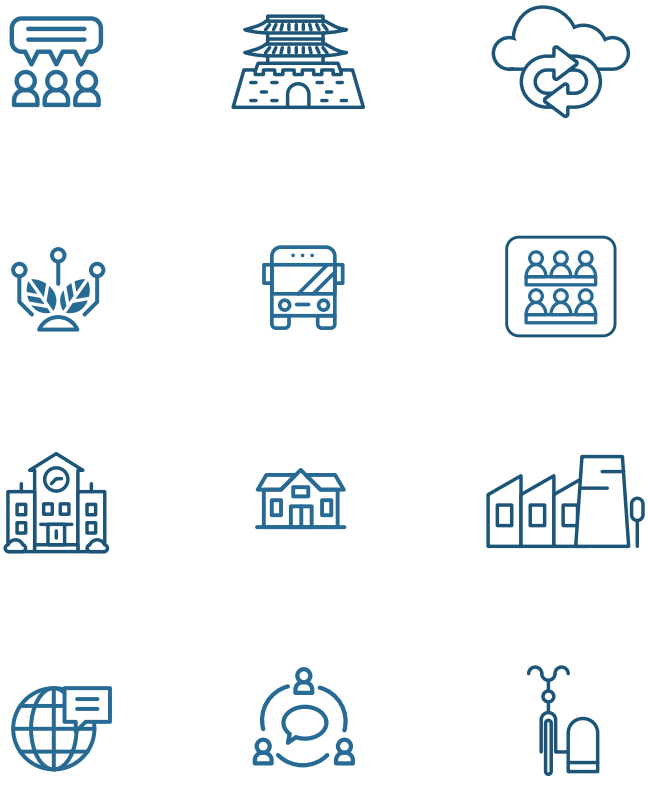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2025-제9호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합동〕 ····· 7

2. 2026년 정부 예산안 〔기획재정부〕 ····· 21

3.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 ····· 60

4.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 ····· 67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 자료

1. 인구감소시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AI기반 범죄예방 전략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75

2. 정부·자치단체 AI 활용 〔나라살림연구소〕 ····· 86

3.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방안 검토 〔국회미래연구원〕 ····· 90

4.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 96

5.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국회입법조사처〕 ····· 108

6. 디지털교육, 새로운 기회의 확대인가, 격차의 또 다른 이름인가 〔한국교육개발원〕 ···· 115

목 차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합리적 지방비 부담구조 마련 등 〔행정안전위원회〕 ····· 125

2.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사업계획 보완 및 중기부 역할의 명확화 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33

3. 5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분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38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 합리적인 방안 검토 필요 〔교육위원회〕 ····· 145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Ⅰ. 정부부처 주요 정책 및 전북자치도 현황

1.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합동)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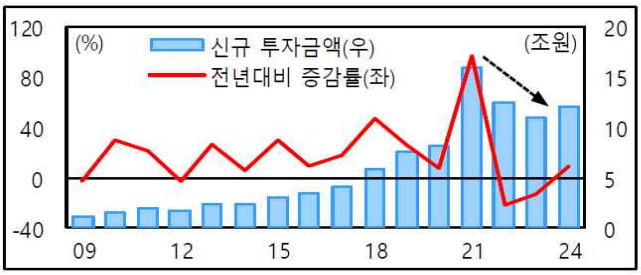
Ⅰ. 한국경제의 실상

○ (성장)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 급락,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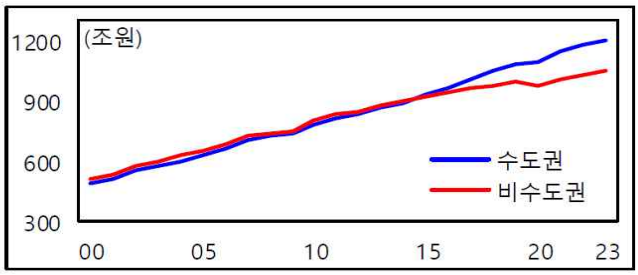
– DX에는 성공했지만 AX·GX가 지연되는 가운데 中기술 추월 + 美관세로 세계무역질서 근본적 변화 → 中企는 물론 대기업도 비상상황

○ (구조) 양극화 심화로 지방·중소벤처기업·서민층이 성장 기회·과실에서 소외

신규 벤처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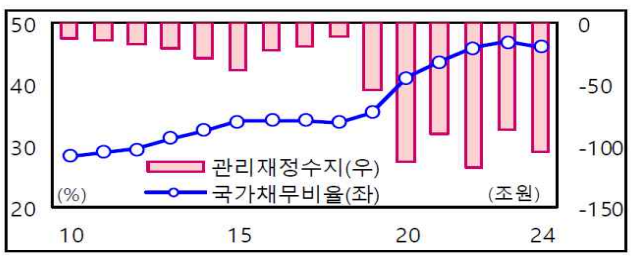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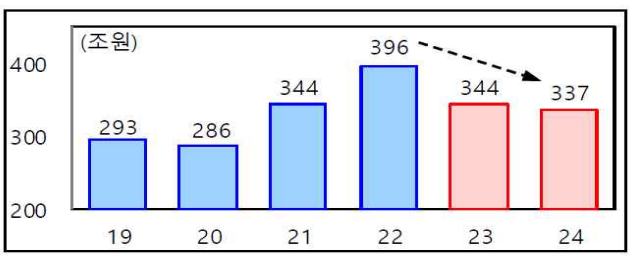
○ (재정·세수) 총지출이 억제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증가 대부분이 의무지출에 사용되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 부족

– 재량지출은 低생산성·低성과(선택과 집중 부족),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도 크게 훼손 → 재정 지속가능성 저하 악순환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국세수입 추이



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진짜성장" 패러다임

◇ 경제 대혁신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성장",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

❶ 구체적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템을 목표(King pin)로 설정

❷ 국가의 모든 역량(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을 총동원해 선택과 집중(高성과 분야 과감히 투자, 低성과 분야 구조조정)

❸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융합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 창출

❖ 핵심 아이템별 ❶기업이 중심이 되어 앞장서고, ❷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 ❸기재부는 지원·뒷받침 → 추진단 구성해 전방위 집중 지원

⇨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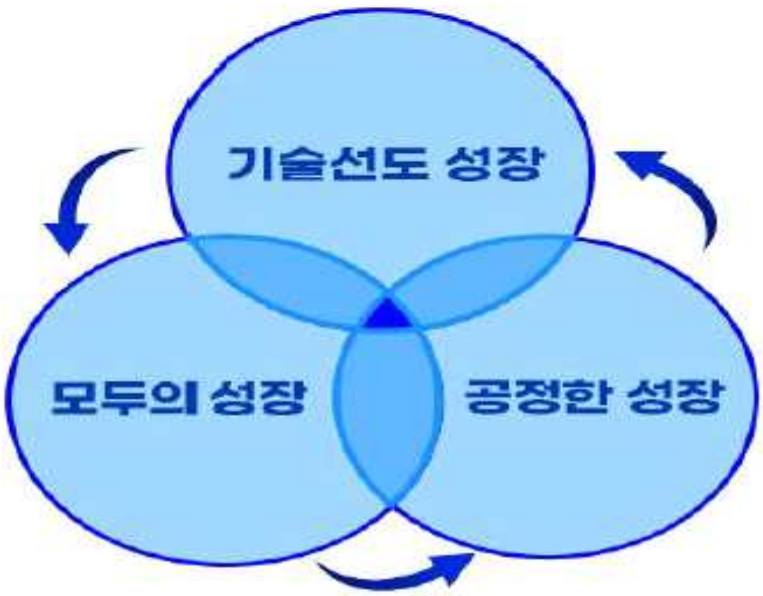
※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몇 개나 만드냐가 관건

비전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성장" 구현

AI 3대 강국 · 잠재성장률 3% · 국력 세계 5강

정책 방향



지속성장 기반 강화

1. 기술선도 성장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AI 대전환(15)

기업	▸ AI 로봇
	▸ AI 자동차
	▸ AI 선박
	▸ AI 가전
	▸ AI 드론
	▸ AI 팩토리
	▸ AI 반도체
공공	▸ AI 복지·고용
	▸ AI 납세관리
	▸ AI 신약심사
국민	▸ 국내 AI인재
	▸ 해외 AI인재
기반조성	▸ 공공데이터 개방
	▸ 데이터 활용
	▸ 국가 AI 협력

초혁신경제(15)

첨단소재·부품	▸ SiC 전력반도체
	▸ LNG 화물창
	▸ 초전도체
	▸ 그래핀(Graphene)
	▸ 특수 탄소강
기후·에너지·미래대응	▸ 태양광·차세대전력망
	▸ 해상풍력·HVDC
	▸ 그린수소·SMR
	▸ 스마트농업
	▸ 스마트수산업
	▸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K-붐업	▸ K-바이오·의약품(AI 바이오)
	▸ K-콘텐츠(게임, 웹툰 등)
	▸ K-뷰티(통합클러스터)
	▸ K-식품

1. AI 대전환

○ (기업) 7대 선도프로젝트 즉시 시행해 제조 AI+X → 피지컬 AI 1등 도약

피지컬 AI	7대 선도프로젝트('25.下 즉시추진)
▸ AI 로봇	▸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레임·핵심부품 등) 및 **산업현장 실증·데이터 학습** 등을 통해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상용화** - **물류 휴머노이드부터 선도적 실증·보급 → 제조·건설·서비스 등 산업 전반 확산** * 업종별 특화 지능형 군집로봇 시스템(4족 보행 로봇 등), 고중량 핸들링 휴머노이드 등 ↳ 예) [조선] 보강재 자율이동 용접로봇, 선박블록 협소공간 작업용 다족 보행 로봇
▸ AI 자동차	▸ **핵심기술 개발, 산업생태계 조성, 데이터·실증 법제 정비***, 교통서비스(버스·택시 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 (기술개발)AI자율주행 핵심기술 집중투자(SDV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AI SW 등) (산업생태계)민관합동 정책협의체(얼라이언스) 구성, 인력 양성,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개최 등 (데이터)일정한 안전조치 하에 원본 영상데이터의 AI 연구개발 목적 활용 허용 (실증)속도제한 등 전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등
▸ AI 선박	▸ 지능형 항해시스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규제특례*** **적용** 및 **연안 내항선박 대상 실증** 등을 **지원**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가속** * 예) 지정된 운항내역 내에서 선박 시설·승무 정원 등 기준 완화
▸ AI 가전	▸ **TV·냉장고 등 가전**에 **AI를 탑재**하고, 이에 기반한 **AI 홈서비스*** **실증·확산**을 지원해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 선점** * 리모컨 없이 음성·제스처로 실내 제어, 감성케어 및 식재료·식단·건강관리 등
▸ AI 드론	▸ **5대 분야**(항공·소방·농업·시설관리·물류) **AI 드론·부품 및 운용·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제조 생태계 조성 및 규제 합리화*** * 드론 비행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안전검사 요건 합리화 등 ※ **AI 항공·소방드론**부터 **선도적**으로 **개발, 실증·보급** 추진('25.下~)
▸ AI 팩토리	▸ **주력 제조업**(자동차 등) **특화 AI 솔루션 보급** 및 **AI 로봇·시설·장비** 도입 등 통해 제조현장에 AI를 결합하는 **AI팩토리 확산** * 예) [화장품] 점도·배합비 등 공정 최적화, 무인화·자율화로 오염 차단 등 - **제조 거점** 중심으로 **AI 팩토리 고도화 핵심기술 개발** 추진 - **AI 기반**으로 **고숙련기술자**의 **현장 전문지식(암묵지) Database 구축**
▸ AI 반도체	▸ **피지컬 AI**에 필수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확산**을 위해 **자동차·가전·로봇·드론**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개발·실증** 지원 * 수요 대기업(자율주행차·IoT가전·협동로봇·무인드론)과 국내 팹리스(설계)·파운드리(제조)를 연계해 개발

○ (공공)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 AI 도입

공공부문	3대 선도프로젝트('25.下 즉시추진)
▸ AI 복지·고용	▸ AI를 활용해 그 지역에서 가능하고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일자리 매칭, 직업교육, 복지지원 등) **24시간 안내** 및 서비스 **신청·접수**
▸ AI 납세관리	▸ **AI 세무상담·검색** 도입('26년), 납세신고·납부신청 자동화 등 **홈택스를 전면 개편**('27년)해 **납세편의 제고**, AI를 통해 **탈루 의심사례 식별·분석**
▸ AI 신약심사	▸ AI를 활용한 신속한 **자료대조·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신약허가 심사기간 대폭 단축** 및 **의약품 영문증명서 발급** 등 **자동처리** * 제네릭의약품 허가에 우선 적용('26.3Q) → 신약허가 등 단계적으로 확대

○ (국민) 인재 양성 + 해외유출 방지 + 해외인재 유치 3대 전략 추진

대상	교육과정	실행기관
▸ 초중고생	▸ **연령대별 AI 이해** 및 **리터러시**, **AI 활용 사고력·문제해결력 함양**	창의재단·EBS
▸ 대학생	▸ **비전공생의 AI 활용 교육** 및 일반교양 차원의 **기본 AI 교육**	KAIST ·방송통신대
▸ 청년·군인	▸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 등 **AI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의무복무병 AI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취업준비 → AI 전문인력화**	한기대·산인공 ·국방부
▸ 일반국민	▸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생활밀착형 AI 서비스 교육**	소진공 ·NIA
▸ 전문가	▸ **AI 융복합 인재 양성**, **첨단 AI 기술 동향**, **고급실습·문제해결** 중심 교육, **해외 최고급인사 초청** 강연	4대과기원

○ (데이터) 데이터 개방, 융합·표준화, 인프라 구축 등 데이터 활용 확대

- 가명데이터 개방 확대(개인정보·데이터 안심구역), 융합·표준화(국가 AI 데이터 표준 마련), 인프라(특화 기술인력 양성)

○ (거버넌스) 정책협력 강화, 산학연 역량 결집,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 정책협력(AI 책임관 지정), 산학연협력(연합체 구축), 국제협력

○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통신 인프라 대폭 확충

- 컴퓨팅인프라(AI 데이터센터 확충), 통신인프라(6G 유·무선 네트워크)

○ (모델·원천기술) 독자모델, 원천기술 등 AI 기술생태계 조성

- AI 기반모델 개발, AI 반도체 생태계 조기 확립, AI 실증단지 구축

○ (법·제도) AI 진흥 위한 법·제도 정비, AI 안전 투자 강화

- AI 기본법 개선, AI 안전(딥페이크 방지)

2. 초혁신경제

○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집중 지원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25.下 즉시추진)
◇ 첨단소재·부품	
▸ SiC 전력반도체	‣ Si반도체 대비 **전력손실**이 적어 **AI시대 핵심소재**이나, **수입**에 **의존**(90%) ‣ **핵심·상용화 기술개발** 등 **자립화** 추진(전기차, 그린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활용) * (R&D)제품 양산 상용화 기술 개발 (인프라)실증을 위한 신규장비 추가 도입 검토 ⇒ **기술자립률 제고**(현재10→'30년20%), **국내생산비중 확대**(현재5%이하→'30년10%)
▸ LNG화물창	‣ **LNG 운반선**은 **조선업 핵심 선종**(매출액 50% 이상)으로 **기술 종속**과 **국부 유출 방지**(기술료로 선가의 약5% 지불) 위해 **독자기술 개발** 필요 ‣ **화물창 단열시스템 생산 제조기반 구축** 등 **화물창 기술 국산화** * (R&D)화물창 소재·부품 고도화 (인프라)극저온 보냉재 등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 구축 (금융)대형선박 실증 위한 선박 2척 인수·개조 비용 융자 지원방안 마련 ⇒ **화물창 분야 기술독립 달성, LNG 운반선 점유율 제고**('24년55% → '30년**70%**)
▸ 초전도체	‣ **의료, 에너지, 교통, 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전자기기 성능혁신, 제조산업** 및 **신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초전도체 핵심기술 확보** 필요 ‣ **의료·첨단 바이오, 핵융합** 등에 **소형화·고성능화**가 **가능**한 **초전도 핵심·기반기술 고도화, 초전도 선재·자석 실용화·상용화,** 시제품 시험평가 핵심 연구인프라 확충 ⇒ **의료**(MRI), **에너지**(핵융합), **교통**(자기부상열차)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혁신
▸ 그래핀	‣ **열·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배터리·연료전지** 등 **에너지소재**로 **활용 가능성 大, 사업화 초기단계**(디스플레이 등 방열소재)로 **미래 수요** 대비 **선제적 육성** 필요 ‣ **원천기술 확보**된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전기차 케이블, 이차전지, 반도체 등) **기술개발** 및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활성화** ⇒ 디스플레이 등 **방열소재 시제품 → 에너지 소재·센서** 분야로 **상용화 추진**
▸ 특수탄소강	‣ **고강도·경량화·내식성** 등 특성을 갖춘 **차세대 특수강**에 대한 **지원** 및 **개발 역량 확보**가 **산업 첨단화**와 **공급망 안정화**의 **필수 조건** ‣ **수요산업 연계 성능한계 극복 특수강 소재·부품 개발** 및 **산·학 협력 인력 양성 추진** * (R&D)자동차용 고규소 전기강판, 조선·에너지용 니켈강·고망간강 후판·강관 기술개발 등 (인력)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 고정밀 특수강 제조 인력 양성 ⇒ **'30년**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관 기술수준 세계 1위 도약**('23년 3위)

◇ 기후·에너지·미래대응

▸ 태양광·차세대전력망	‣ **태양광**과 **ESS, AI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기술결합**으로 **전력계통 제약 해소**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필요 ‣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및 **태양광유리**(BIPV : 건물일체형태양광) **기술력 확보**와 **상용화**에 **R&D 지원***을 집중하고, 트랙레코드 확보** *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적층기술, 페로브스카이트 원천기술 확보·실증·BIPV 상용화 지원 신설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상용화 단계 기술의 실증·테스트 기회 제공 ‣ '분산 전원(태양광, ESS) + AI 운영 S/W'의 분산전력 시스템 구축 및 대규모 실증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HVDC	‣ **해상풍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 에너지원이며, **HVDC**는 장거리 해저 전력전송이 가능한 기술로서 **차세대 핵심 전력인프라** ‣ **핵심기술**(풍력터빈*, 대용량 HVDC**) 및 **풍력 연계기술**(하부구조물, 타워, 선박) 병행 개발 * 20MW+급 풍력터빈 개발 및 상용화 추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확보(~'30) **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27), 전력망 내 실증(~'30) 등 ⇒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및 '해상풍력+HVDC+변압기' **기술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SMR	‣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인 **그린수소** 및 **SMR**에 대한 **기술개발·실증 지원** 등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및 수출 동력화 추진 ‣ **그린수소 고효율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생산역량·경제성 제고 + SMR 기술개발·실증지원,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 구축**** 등으로 경쟁력 제고 * 현재 11MW 실증사업 중(제주) → (향후)최대 100MW급 시범사업 추진 ** 부산 · 창원 · 경주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 **그린수소 초격차 생산기술 확보** 및 **SMR 표준설계인가 획득**(~'28) 추진
▸ 스마트농업 ▸ 스마트수산업	‣ **기후변화**로 인해 **노지·바다**에서 **생육·사육**이 **어려운 환경**에 대응해 **AI 기반 스마트 농업·수산업**로 **대전환**해 **식량안보 강화** 필요 ‣ **스마트 농업육성지구**('26.上)·**양식단지**('25.下) 각 **1개소**를 **혁신 선도지구***로 **선정**해 **AI·빅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사육 관리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 *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관 산업시설 집적화 - **전문연구단**을 구성해 **AI 활용 스마트 농업·수산업 모델 설계**를 **지원·보급**하고, **AX** 기반 **농작업·양식 기술** 등 **개발** 및 **실증·확산** ⇒ **스마트 농업**(원예)/**수산업 도입률 확대** : ('24)16.2/2.5% → ('30)35.0/10.0%
▸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활용	‣ **우주·항공분야 기술자립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간 기술이전이 어려운 **초고해상도 위성개발**과 **AI기반 기후·환경 데이터 분석** 및 **정밀 예측** 필요 ‣ **세계 최고 수준**의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산학협력** 통한 **고급인력** 양성, 기술기반 창업 **우주기업 전용 펀드**(뉴스페이스펀드) **규모 대폭 확대** ‣ AI·위성영상* 활용 기후탐지·예측·영향평가 등 AI기반 미래기후 기술개발 지속 지원 * 정지궤도위성(36,000km) 및 저궤도위성(2,000km이하)을 통한 양질의 기후·환경 데이터 확보 강화 ⇒ 국가 주력 산업화 및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 재해 조기 대응 및 기후테크 선도

◇ K-붐업

▸ K-바이오·의약품 (AI 바이오)	▸ 국내 AI 바이오 및 신약 완제품 개발 활성화,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바이오산업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필요 ▸ AI 바이오 산·학·연·병 거점 선정, 첨단바이오 소재 개발*, 가칭국민성장펀드 등 활용 신약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수출모델 수립 * 코로나19 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및 국산화, 오가노이드·유전자치료 등 재생의료 치료제 R&D, 합성생물학 전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지속 지원 등 ⇒ 블록버스터 신약(연 매출 1조원 이상) 탄생, 해외 직접판매 확대('23년0.2 → '30년1.4조원)
▸ K-콘텐츠 (게임, 웹툰 등)	▸ AI 콘텐츠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성장 중('25년200 → '33년e1,753억불) → AI 기술로 K-콘텐츠 수익구조 다각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 콘텐츠 전략펀드 등을 통한 게임·웹툰 등 K-콘텐츠 투자 확대, 콘텐츠(게임·방송·OTT 등) 제작 全주기 AI 확산, AI 콘텐츠 인재양성, 게임·웹툰, 영상 등 大·中企 협동 기술개발 ⇒ K-콘텐츠 수출 규모 확대('22년132 → '30년250억불)
▸ K-뷰티 (통합클러스터)	▸ K-뷰티 유망 중소 수출기업 육성, K-할랄 화장품 수출확대 지원(해외인증 등) 등 통해 글로벌 화장품 수출 2강으로 도약 * '24년 화장품 수출 순위: (1위)프랑스, 233억불, (2위)미국, 112억불, (3위)한국, 102억불 ▸ 맞춤형 K-뷰티 통합 클러스터(체험·문화·관광·산업융합) 육성(1곳) 통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육성 ⇒ 中企 수출('24년68 → '30년100억불) 및 수출기업('24년8,987 → '30년10,000개社) 확대 [K-할랄 화장품 수출액 확대('24년 9→ '30년15억불)]
▸ K-식품	▸ 한류 확산 시너지를 토대로 K-식품 글로벌 시장확대를 위한 전주기 종합 지원 - K-컬처·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수출 확대 전략 추진, 주요 수출국 내 현지 물류 인프라(공동물류센터 등) 확대, 중소·중견 기업 시설·자금 지원 확대, 수출정보데스크(aT) 개편 등 ▸ 약 3조달러 규모('27년)의 할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통관지원, 상호인정 확대, K-할랄 마케팅 지원 등 전방위 지원 추진 ⇒ K-식품 수출액 대폭 확대('24년100→ '30년150억불) [K-할랄 식품 수출액('24년11→ '30년18억불)]

3. 주력산업 고도화

○ AI 제조공정 혁신, 저탄소·고부가전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

4. 녹색 대전환

○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및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

-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예정('25.下)
- 재생e 목표(~30, 78GW) 상향 로드맵 수립·이행

○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금융 확대

2. 모두의 성장

1. 지역균형성장

○ AI 기반 지역 산업·관광 집중 육성해 지역주도 성장

초광역권	성장엔진(예시)
❶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석유화학, 철강
❷ 서남권 전북·광주·전남	‣ AI·미래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농생명·식품산업
❸ 대경권 대구·경북	‣ 로봇·자동차부품,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❹ 중부권 대전·충청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기초R&D
❺ 강원·제주권	‣ 관광, 청정 에너지, 바이오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연계거점	관광지	숙박	교통·안내	식음	쇼핑	체험·K-컬처
지원사업	관광지 조성/ 관광 인프라 구축·개선	숙박 개·보수/ 서비스 개선/ 인력 양성	교통·안내 인프라 개선/ 교통망 확충	지역 특화 음식 홍보/ 상품 개발	쇼핑편의제고 지역 특화 기념품 개발	K-컬처 거점/ 관광상품 개발
통합지원	통합 홍보·마케팅 + 통합 상품 개발 + AI 기술 혁신 관광 서비스·체험 + 역내 교통 + 안내 체계 + 관광기업·스타트업 육성 + 인력 양성					
추진체계	범부처 관광 통합 지원체계 「(가칭)K-지역관광 TF」 구축 + 「K-지역관광 추진단」(문체부-한국관광공사-지자체) 신설해 사업 총괄·집행					

○ 지역 투자 촉진 및 소득 기반 확충, 재도약 지원 등 격차 해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단계적 확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 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

2. 중소 · 벤처기업 성장

○ 유망 초기기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

- 벤처기업 적극 발굴, 모태펀드 확대, 민간 벤처투자 활용

○ AI 대전환, 스케일업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 스마트 공장 확대, 중소기업 성장유인

3.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 규모화·스마트화 통해 근본적 경쟁력 제고

- 특성화·규모화 지원, 상권 규모·유형별로 대형·관광형글로컬 상권, 중형·산업형지역 대표상권, 소형·근린형소규모 골목상권 육성

○ 금융비용·수수료 등 핵심 비용부담 완화 및 소득 보장 강화

- 금융지원 추가 보강, 결제대행수수료 합리화방안 마련, 착한 임대료, 노란우산공제 공제부담 납입한도 상향

4. 민생경제 활력 제고

○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 AI 격차 해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등 개선방안 추진, 연금제도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 청년·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주거안정 및 자산형성 지원

- 생활비 경감, 주거안정, 자산형성 지원

5. 인구위기 대응

○ 자녀 양육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강화

- 아동수당 대상 단계적 확대,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확대

○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 출산휴가·육하휴직 확대, 장려금 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

○ 청년·고령층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 구직촉진수당 확대 검토, 정년 연장, 노인일자리 확대

3. 공정한 성장

1. 대 · 중소기업 상생 · 협력

○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기술탈취 대응 강화

-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통한 불공정 거래 해소,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 핵심 인프라 전면 정비, 협업구조 확립 등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상생·협력 인프라 정비(성과공유제, 동반성장평가, 상생협력기금), 대·중소기업 협업 확산(교육훈련, 협력모델 확산)

2. 공정 · 안전한 노동시장

○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임금격차 완화, 비정형근로자 보호, 원·하청 상생

○ 핵심 인프라 전면 정비, 협업구조 확립 등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원·하청 협력체계 구축, 적극적 위험예방, 산재 적극 보상), 제재 강화

4. 지속성장 기반 강화

1. 생산적 금융

○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기업지배구조 개선(상법 안착, 합병·분할 등 제도 개선, 기관투자자 역할 강조), 공정한 시장질서(원스트라이크 아웃, 단기매매차인 반환청구 의무화, 소비자 보호, 상장폐지),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 증시 수요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 증시 수요기반(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퇴직연금 확대), 성장유망 기업의 정확한 가치 평가 및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2.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별로 관련 규제 전체 개선

- 신산업규제 해소, 지역발전 규제 해소, 그림자규제 해소

○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 및 기존 법령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 규모별 규제 개선, 네거티브 규제, 메가특구 도입, 거버넌스 구축

○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경제활동 위축 방지

- 형사책임 완화, 민사상·금전적 책임 강화, 배임죄 개선 논의

2. 공공부문 대혁신

○ **[재정]** 전략적 재정투자 및 재정제도 혁식 등 성과중심 재정운영

- 성과중심 전략적 재정투자(초혁신프로젝트 등 高성과 부문에 선택·집중 투자)
- 제정제도 혁신(초혁신프로젝트 예타 면제, 국가계약제도 유연성 제고, 민간투자 확대)

○ **[공공기관]** 초혁식경제 뒷받침을 위해 새로운 경영평가 체계 구축
- 상장 공기업 평가체계 구축, 공공기관 종합평가

○ **[연구기관]** 초혁신경제 등 국가 임무 해결 중심으로 목표 재조정
- 대형과제 재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대학]** 국립대·사립대 특성화 및 이공계 전폭 지원
- 거점국립대 성장 기반 구축, 지방사립대 특성화, 이공계 전주기 성장 지원 강화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 (소관부서 : 미래첨단산업국 외)

○ 전북자치도의 산업구조는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 농기계 등 중소 제조업 비중 높음

○ 전북특별법의 시행과 함께 농생명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전국 최대 농업 생산지를 바탕으로 식품·농기술 관련 기업이 다수임

○ 새만금 지역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인프라를 확대 중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매우 높은 상황임

○ 전북자치도의 경제지표는 수도권 대비 생산성 낮으며, 수도권과의 **GRDP 격차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 유출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인구 감소·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전북자치도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미흡에 따른 초기 창업 투자가 부족하며, **유니콘 기업**이 **부재**하여 새정부 전략과 연계한 분야별 전북의 성장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임

○ 먼저 AI·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하여 **AI 모빌리티 클리스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군산·익산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전기차 부품,

AI 기반 교통시스템 마련을 위한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확정된 피지컬 AI 실증센터 구축과 함께 **AI 공동훈련센터**를 유치하여 대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AI 교육 확대를 통한 인력 양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농생명·식품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26년 상반기에 예정된 **스마트농업 선도지구 지정**을 통하여 AI·빅데이터 기반 정밀 생육관리, 자동화 양식 시스템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특산물 기반 식품기업의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할랄 인증,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으로 **해외시장 진입 촉진 정책**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GX 기반 확대를 위하여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하여 태양광·풍력 중심의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하여야 하며, 기업 유치시 **전력계통 우대 및 입지 인센티브 추가 제공 방안**이 필요함

○ 지역투자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수도권 기업의 전북 이전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연장이 필요함

○ 인재유치를 위하여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여 전북대·원광대 등 지역 대학의 전략산업 중심 특성화를 위하여 혁신 단과대학 신설, R&D 프로젝트 집중 지원이 필요함

○ 관광·문화 융합 산업을 육성을 위한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시범지역** 선정을 통하여 전주 한옥마을, 고창 고인돌, 무주 덕유산 등 관광자원 활용하여 AI 기반 관광 콘텐츠 개발, 교통·숙박 인프라 개선이 필요

2. 2026년 정부 예산안 (기획재정부)

Ⅰ. 기본방향

◇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 : 새정부 핵심과제 충실히 반영**

❶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

❷ **高성과에 집중투자하고, 低성과는 구조조정 → 성과 중심 재정운용**

1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

○ 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지속가능 재정」**의 선순환 구조 정착

2 초혁신경제, 주요 핵심과제 등 高성과 부문에 전략적 재정투자

○ 우리 경제의 '**대혁신**'을 이끌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지방거점성장** 등 초혁신아이템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

○ **새정부 주요 핵심과제***는 충실하게 반영하여 국정철학 뒷받침

*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 **따뜻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적약자 지원, 국민안전**에도 중점

3 低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

○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핵심과제에 재투자

○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 감안하여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누수 최소화**

Ⅱ. 예산안 전체모습

□ [총수입]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2조원 [+22.6조원]

○ **국세수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세수확보 노력 등으로 '25년 대비 **+7.8조원** 증가('25년 본예산 382.4 → '26년안 390.2조원)

* 세입경정(△10.3조)을 고려한 '25년 추경 대비로는 +18.1조 증가(+4.9%)

○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4.8조원** 증가 ('25년 본예산 269.1 → '26년안 283.9조원)

□ [총지출]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0조원 [+54.7조원]

○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대폭 상향**('25년 본예산 2.5 → '26년안 8.1%)

○ **초혁신경제, 사회적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

< 2026년 재정운용 모습 >

(단위: 조원, %)

	'25년		'26년 예산안(B)	증감(B-A)	
	본예산(A)	2회 추경			%
◇ 총수입	**651.6**	**642.4**	**674.2**	**+22.6**	**3.5**
· 국세수입	382.4	372.1	390.2	+7.8	2.0
· 세외수입	269.1	270.3	283.9	+14.8	5.5
◇ 총지출	**673.3**	**703.3**	**728.0**	**+54.7**	**8.1**
· 예산	447.4	467.3	481.5	+34.1	7.6
· 기금	225.9	235.9	246.5	+20.6	9.1

□ [수지 · 채무] 관리재정수지 △4.0%, 국가채무 51.6%

○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0%이며,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1.2%p 상승한 △4.0%

○ **국가채무**(GDP 대비)는 전년대비 3.5%p 증가한 51.6%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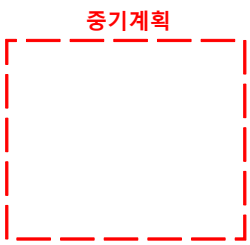
	'25년		'26년 예산안(B)	증감(B-A)
	본예산(A)	2회 추경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21.7 (△0.8)	△60.8 (△2.3)	△53.8 (△2.0)	△32.1 (△1.1%p)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73.9 (△2.8)	△111.6 (△4.2)	△109.0 (△4.0)	△35.1 (△1.2%p)
◇ 국가채무 (GDP 대비)	1,273.3 (48.1)	1,301.9 (49.1)	1,415.2 (51.6)	+141.8 (+3.5%p)

□ [중기계획] 국가채무 '29년 GDP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

○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 수준,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점진적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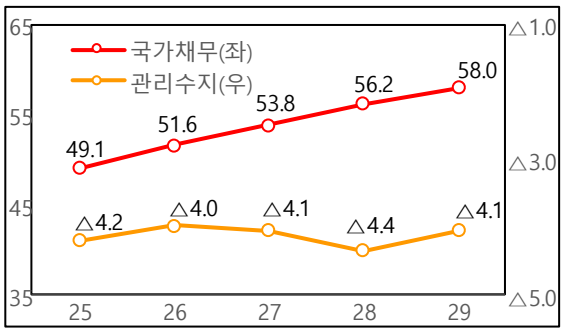
○ **국가채무**(GDP 대비)는 **'29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

< 총지출 증가율(전년대비 %) **>**



* 본예산 기준

< 중기 국가채무·관리수지(GDP 대비 %) **>**



* '25년은 2차추경 기준

〈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

(조원)

구 분	'25년 본예산(A)	'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총지출	673.3	728.0	54.7	8.1
1. 보건·복지·고용	248.7	269.1	20.4	8.2
2. 교 육	98.5	99.8	1.4	1.4
(교부금 제외)	(26.2)	(28.2)	(2.0)	(7.5)
3. 문화·체육·관광	8.8	9.6	0.8	8.8
4. 환 경	13.0	14.0	1.0	7.7
5. R&D	29.6	35.3	5.7	19.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2.3	4.1	14.7
7. SOC	25.4	27.5	2.0	7.9
8. 농림·수산·식품	25.9	27.9	2.0	7.7
9. 국 방	61.2	66.3	5.0	8.2
10. 외교·통일	7.7	7.0	△0.7	△9.1
11. 공공질서·안전	25.0	27.2	2.2	8.8
12. 일반·지방행정	110.7	121.1	10.4	9.4
(교부세 제외)	(43.6)	(51.7)	(8.1)	(18.6)

Ⅲ. 재정 혁신

1 지출 구조조정

□ (**실적**) 역대 최대인 **△27조원** 수준을 절감하여 핵심과제에 재투자

* 지출구조조정 실적(조원): ('22) △12.8 ('23) △24.1 ('24) △22.7 ('25) △23.9

□ (**특징**) **사업 재구조화** 적극 추진, **경상비·의무지출** 절감 병행

❶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추진

❷ 사업비 외에도 **연례적 행사·홍보, 행정경비** 등 경상비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하여 **공공부문 효율화** 도모

❸ 중장기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무지출 제도개선**도 병행

❹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한 **국민들의 제안** 적극 반영

	주요 사례
1 **경상비**	√ 공무원 출장 최소화 및 회의·교육 비대면 전환 등 효율화 √ 연례적 행사·홍보성 경비 절감(약 △500억원)
2 **사업비**	√ 단기간 급증한 ODA 사업 정상화 및 저성과·중복사업 정비 등(△1.6조원) √ 좀비·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 축소(△0.7조원) → 유망기업 집중 지원 √ 비도전적 소규모 수탁과제 감축(△0.5조원) → 국가임무 대형 과제로 전환
3 **의무지출**	√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여 고등교육 및 영유아 교육·보육에 재투자 √ 반복수급자 대상 재취업(구직)활동 인정기준 강화 → 도덕적해이 최소화
4 **국민제안**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수당 조정(시간→활동별) → 취업지원 내실화 √ 장병수요 감안, 병영독서용 종이책 절감 → 전자책, AI 교육에 재투자

2 재정사업 지방우대

□ **(시범사업 추진)** 아동수당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에 **인구감소, 지역 낙후도**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 원칙** 시범 도입

○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지역 3단계** 구분

- **(특별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 **(우대지원)**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 사업 특성에 따라 **수혜자 지원금 인상**(예: 특별20%/우대10%/일반5%), **사업 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률 인하** 등 **지역별 지원 차등화**

<table>
<tr><th>구 분</th><th>현 행</th><th>우대내용</th></tr>
<tr><td>아동수당</td><td>아동 1인당 월 10만원
(전국 공통)</td><td>특별12만원 / 우대11만원 / 일반10.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 수령 시
특별·우대지역 +1만원 추가 지급)</td></tr>
<tr><td>노인일자리</td><td>비수도권 배분비중
70.4%('25년)</td><td>'26년 일자리 확대분(+5.4만개)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4.7만개)</td></tr>
<tr><td>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Ⅱ유형)</td><td>-</td><td>특별720만원 / 우대600만원 / 일반48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2년간)</td></tr>
<tr><td>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td><td>월 31.6만원</td><td>인구감소50만원 / 비수도권40만원 / 수도권30만원
(Top-tier AI 융복합 과정: 80/60/40만원)</td></tr>
<tr><td>지역사랑상품권</td><td><table><tr><th>(%)</th><th>일반</th><th>인구감소</th></tr><tr><td>국비지원</td><td>2</td><td>5</td></tr><tr><td>할인율</td><td>7</td><td>10</td></tr></table></td><td><table><tr><th>(%)</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h>인구감소</th></tr><tr><td>국비지원</td><td>3</td><td>5</td><td>7</td></tr><tr><td>할인율</td><td>8</td><td>10</td><td>12</td></tr></table></td></tr>
<tr><td>창업사업화 지원</td><td>창업기업 자부담률
30%</td><td>특별10% / 우대20% / 일반25%</td></tr>
<tr><td>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td><td>중소기업 자부담률
15~55%(매출액별 상이)</td><td>특별5~40% / 우대5~45% / 일반10~50%</td></tr>
</table>

□ **(통합지표 개발)**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통합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7년부터 지방우대 사업 순차 확대**

3 지방 자율성 제고

□ (**포괄보조**)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를 **'25년 3.8 → '26년 10.6조원**으로 **3배 정도 대폭 확대**

○ **지역적 사업 74개**(47→121개, 5.7조원)를 이관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및 자율성 제고를 위해 **1조원 투자재원** 추가

* (예) 도시재생, 하수관로 등 지역 기반시설 정비, 로컬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 과소투자 우려 등이 제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지정**
(예)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경로당 등 6개 사업)

□ (**초광역권**) 초광역권 단위로 수행시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 자원 공동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인센티브 부여

* ('26년) 사업설계를 위한 사업기획비 반영 → ('27년~) 본격적으로 추진

4 성과지향 출연연구기관 개편

□ (**과기계**) 소규모 수탁과제(1,877개, 4,685억원)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국가 대형 임무 과제**(100개)에 집중 투자

○ **전담평가센터**를 통해 성과를 예산으로 환류하고,사업 목표 조기 달성시 **잔여사업비**를 **성과급**으로 지급

'25년 종료 소규모 과제
1,877개
(각 2~3억원)

국가 대형 임무 과제 100개

A (55개)	· 개인 AI에이전트를 위한 AI-인글라스 기술개발(총 465억원)
B (17개)	· 환자맞춤형 국산 고성능 방사선암치료기(총 375억원)
D (4개)	· 한국형 우주망원경 핵심기술 개발(총 450억원)
E (11개)	· 도시형 CO_2 포집 및 CCU 건설재료 기술 개발(총 417억원)
F (13개)	· 자율 구성 모듈형 휴머노이드(총 355억원)

□ (**인문사회계**) 기관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고 부처 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 → ①**수탁과제 최소화**, ②**부처 의견수렴 의무화**

Ⅳ. 중점 투자방향

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51→72조원, +41%)

1 AI 3강을 위한 대전환 (3.3→10.1조)

· 신규피지컬 AI 중점사업 추진	0.5조
· 신규AX-Sprint 300(생활밀접형)	0.9조
· 국내 핵심 인재 1.1만명 양성 등	0.6조
· GPU 1.5만장 구매	2.1조

2 신산업·R&D 혁신 (36.4→44.3조)

· R&D 역대 최대 증가(+19.3%)	35.3조
* A·B·C·D·E·F 첨단기술 고도화(10.6조)	
· 신규국민성장펀드(100조원 이상)	1.0조
· 모태펀드 역대 최대 출자	1.0→2.0조

3 통상현안대응·수출 지원 (1.6→4.3조)

· 조선 MRO 등 글로벌 협력 강화	0.1조
·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	0.2조

4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6.0→7.9조)

· 신규RE100 산단, 신규분산형 전력망	0.3조
· 신재생에너지 보조·융자 확대	0.5→0.9조
· 신규전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	0.2조

5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4.2→5.7조)

· 한류연계 붐업	3.2조
·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0.5조

2.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144→175조원, +22%)

1 지방거점성장 (19.0→29.2조)

·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0.9조
·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	0.5조
· 신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6개 군)	0.2조
· 지역·필수·공공 의료 확대	1.1조

2 저출생·고령화 대응 (62.6→70.4조)

· 아동수당 연령 상향(+1세) 및 지방 우대	2.5조
· 신규청년미래적금(납입금 6/12% 매칭)	0.7조
· 신규비수도권 취업청년 우대	0.9조
· 신규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0.1조

3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29.2→32.1조)

· 기초생활보장 확대	22.5조
· 장애인 돌봄·일자리 확대	4.6조
·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상담 지원 등	0.1조

4 민생·사회연대경제 (17.6→26.2조)

·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지원	1.2조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25만원)	0.6조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0.2조

5 산재예방·취약노동자 보호 (16.0→17.6조)

· 산업재해 예방 필수설비·인력 지원	0.3조
·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0.7조

3.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25→30조원, +18%)

1 재난 예측·예방·대응(3.9→5.8조)

· 풍수해정비 등 재난 대응	2.6 → 3.3조
· 신규한국형 기상 예측 시스템 등	276억

2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21.2→23.8조)

· 최첨단 무기체계로 전환	3.2조
· 남북협력기금 확대	0.8 → 1.0조

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①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 3.3→10.1조원

【AX】 "산업 · 생활 · 공공 전분야 AI 도입" 0.5→2.6조원

○ (산업)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 **집중 투자**(0.5조원, 5년간 6조원)

* 주요 중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

-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선도

	주요 내용	사업 예시
• AI 로봇	√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플랫폼, 로봇 핵심부품 개발·상용화	· 글로벌 AX혁신 기술개발 (총사업비 5,510억원)
• AI 자동차	√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자율주행 기반 교통서비스 도입	· AX 실증밸리 조성 (총사업비 6,000억원)
• AI 조선	√ 스마트항해시스템·기관시스템 무인화, AI 기반 항로표지 설치 등	·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총사업비 약 6,000억원, 잠정)
• AI 가전 ·반도체	√ TV·냉장고, 지능형 홈서비스 등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 선점	·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총사업비 9,973억원)
• AI 팩토리	√ 제조 데이터 수집·가공, 업종별 특화 AI 솔루션 보급·도입	· 피지컬 AI 기반 자율제조 (총사업비 2조원)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거점** 조성 및 대규모 AX R&D·실증 추진을 통해 AI 기반 **지역 혁신** 촉진

- **(광주)** 에너지·모빌리티 AX('26년 240억원)
- **(경남)** AI 기반 기계·부품 가공('26년 400억원)
- **(전북)** AI 팩토리 테스트베드('26년 400억원)
- **(대구)** 로봇·바이오 AX('26년 198억원)
- **(대전)** 버티컬AI 대전환('26년 1,594억원)
- **(부울경)** 해양·항만 AX('26년 370억원) 등

○ (**생활**)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신규**AX-Sprint 300**" 추진(0.9조원)

* (예) 자동음향조절 마이크, 피부분석·화장품 추천 거울, 신생아 울음소리 분석 등

- **(개요)** 총 10개 부처* 참여, 제품별 10~40억원 출연·보조 + 2,000억원 융자
  *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해수부, 국토부, 식약처
- **(유형)** Type1 : 즉시 개발 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145개, 기간 1년)
  Type2 : 국민 활용도가 높고, 시장 파급력이 큰 품목(155개, 기간 2년)

○ (**공공**) 공공 AX 프로그램 확대 및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 3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AI 도입·확산(0.2조원)

구분('26년안)	**주요 사업**
• **공공 AX 프로그램** (1,000억원, 공모)	· (Track 1) 2년간 30억원 × 40개(20개 계속 + 20개 신규) · (Track 2) 2년간 100억원 × 5개(신규)
• **대국민 편의 제고** (370억원)	· AI 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실시간 추천(총 355억원) · 세무상담, 납부신청 자동화 등 납세편의 제고(총 0.1조원)
• **국민안전·재난대응** (239억원)	· AI 기반 과학적 순찰 등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총 64억원) · 실시간 AI 화선 탐지 등 효율적 산불 진화체계 구축(총 30억원)
• **편리한 기업환경 조성** (194억원)	· AI 활용을 통한 신약허가 심사기간 단축(총 201억원) · 제조데이터 AI분석을 통한 공정관리·예측 등 지원(총 180억원)

- 대규모 **NPU 테스트베드** 확대(2→3개) 및 단계별 사업화 지원, 신규**공공 CCTV AI 전환** 등 **국산 NPU 수요 창출**(0.1조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피지컬 AI 중점 사업	-	4,862	· 로봇·자동차·조선·가전·팩토리 등
- 공공AX 프로그램	- (추경150)	1,000	· 45개 사업 AX 추진
- 공공 선도 프로젝트	111	803	· 고용·복지, 납세, 신약심사 등
- AX-Sprint 300	-	8,920	· 생활밀접형 300개 제품 AX (출연·보조 6,920억원 + 융자 2,000억원)

【기반조성】 "전국민 AI 붐업, GPU 5만장 조기 확보" 2.7→7.5조원

○ (**인재양성**)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고급인재 양성** 확대, 세대별 **맞춤형 교육** 등 **전국민 AI시대** 개막

- AI·AX 대학원(19→24개교),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5→13개) 확대로 국내 **고급인재 1.1만명 양성**

* 석·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외 생성AI 기업과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 지원

- 청년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교육을 **AI** 중심으로 **전환**하여 **대폭 확대***(410→1,650명)하고, **Top-tier**** 등 **직업훈련 과정** 신설

* AI·이노아카데미(300→1,200명), AI마에스트로(110→450명) + 우수학생 해외 연수(80명)
** 기업협력형 AI융합 직업훈련 프로그램 +1만명(기존유형 전환 0.6+신규 0.4)

- AI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확산**하고, **자격제도** 신설, **경진대회** 개최 등 AI Boom-up 추진

대상	초·중·고	대학생	연구자·전문가	청년·전국민
• On-Off 거점	4대 과기원, AI테스트베드, AI라운지, AI배움터 등			
• 프로그램	EBS	비전공생 활용 교육	심화교육	직업훈련, 군장병
• 경진대회·관련 행사	AI창작대회, 로보틱스챌린지	AI루키	AI챔피언	공모전, 퀴즈톡톡, 페스티벌

○ (**인프라**) 최신 고성능 **GPU 구매**, 전주기(데이터·GPU·클라우드 등) **바우처** 지급, 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등 필수 **인프라** 조성

- (GPU) 고성능 **GPU 1.5만장**을 **추가 구매**하여, **5만장 확보 목표**(정부 3.5만 + 민간 SPC 1.5만) 중 **정부구매분 조기** 달성

- (바우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신규**통합바우처**(20개사)를 제공하고, 기존 소규모 **데이터·클라우드·GPU** 바우처도 지속 지원(0.1조원)

- (클라우드) 신규**국립·지방의료원** 시스템의 **AI-SaaS** 개발 사업을 **신설**(150억원)하는 등 **클라우드 가속화** 추진

-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개방**하는 "신규**클러스터***(300억원)" 및 분야별 **데이터** 공유·거래 플랫폼 "신규**스페이스****(120억원)" 구축

* 바우처 등으로 확보된 데이터, 민간·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전환·공개
** 표준·규칙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유·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 (**연구기반**) 신규**AGI 준비 프로젝트**, 신규**피지컬AI 선도기술**, 신규**버티컬AI 연구지원센터**(NAIS) 등 미래 AI **연구기반** 조성

- (AGI) 민간 중심의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업**(SPC) 출자
- (피지컬AI) **제조·물류** 등 全분야에 활용가능한 **선도기술 개발**
- (버티컬AI) 단기간 내 특화 모델 확보를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7대 도메인**** AX에 필수적인 **버티컬AI** 개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부설 독립연구센터(대덕 본원/부산 센터 포함) 구성

** A(Quantum+Base AI), B(AI+Bio), C(AI+Culture), D(AI+Defence), E(AI+Energy+Material), F(AI+Factory+Mobility), G(AI+Green Intelligent Marine Technology)

	주요 내용	'26 예산
• **AGI** (범용인공지능)	· AGI 시대 준비를 위한 민간주도형 SPC 출자	200억원
• **피지컬AI**	·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 全분야에 활용 가능한 초적응·초성능 피지컬AI 선도기술 개발	150억원
• **버티컬AI**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부설 버티컬AI연구지원(NAIS)를 신설하여 7대 도메인 버티컬 AI 개발	400억원

○ (**자금지원**) **AI 혁신펀드**(0.1조원), **딥테크·AI펀드**(0.3조원) 조성 등을 통해 AI 분야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인력 확보**	**0.7조**	**1.4조**	
- AI·AX대학원	335 (추경 100)	610	· 19 → 24개 확대
- AI 마에스트로	78	277	· AI 교육 참여수당 지급(100만원/월) 및 해외연수 제공 등
- AI·이노아카데미	51	451	
○ **인프라·연구기반 조성**	**1.9조**	**5.4조**	
- 고성능 GPU 구입	- (추경 14,608)	20,841	· 1.5만장 추가 구매('25년 추경 1.0만장)
- 신규AX 통합바우처 등	-	898	· 기업당 2년간 30억원 지원 등
- 신규AGI준비 프로젝트	-	200	· AGI 준비를 위한 SPC 출자
- 신규버티컬 AI연구지원센터	-	400	· 핵심분야 버티컬 AI 개발·최적화
○ **자금지원 등**	**0.1조**	**0.7조**	
- AI 혁신펀드	450	1,000	· 민간투자 유도 AI기업 전용펀드 출자
- 딥테크·AI펀드	- (추경 1,500)	2,750	· 딥테크·AI기업 중심 전용펀드 출자

2 R&D 확대, 유망기업 스케일업으로 신산업 혁신 36.4→44.3조원

【 R&D 】 "역대 최대 수준인 19.3% 증가" 29.6→35.3조원

○ (첨단기술)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R&D 성과 가시화 촉진**(8.0→10.6조원)

- **(A, AI)** 피지컬 AI **5대 선도사업**,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1.1→2.2조원)
- **(B, 바이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AI 모델 활용 **항체** 개발·실증(1.3→1.6조원)
- **(C, 콘텐츠)** AI **콘텐츠 제작기술** 개발, IP기획 창작기술 개발(0.1→0.2조원)
- **(D, 방산)** 보라매(KF21), L-SAM-II, 핵심부품 국산화 및 **국산 엔진** 개발(3.1→3.9조원)
- **(E, 에너지) SiC반도체, 태양광유리, LNG 화물창** 등 핵심기술 개발·상용화(2.2→2.6조원)
- **(F, 제조) 특수탄소강** 기술개발,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0.4→0.5조원)

- **스마트팜·피셔리**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R&D 확대(0.7→1.0조)

○ (민간연계) TIPS, 사업화보증 등 **민간 수요 기반의 기술사업화**

- **(TIPS)** 지원 금액(일반 5→8억원, 스케일업 12→30억원) 및 기업(846→1,240개) 대폭 확대
- **(사업화보증)** 유망기업 대상 프로젝트 기반 신규**R&D 사업화 보증**(0.3조원 공급)

○ (인재) **첨단인력 3.3만명** 확보를 위한 **3대 프로젝트** 추진

- **(국내인재 양성)**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2.7→3.1만명), 산학공동연구 강화
- **(해외인재 유치)** 세계 최대 규모 해외인재 유치(640명, 5년간 2,000명)
- **(우수인력 유출방지)** 집단·개인연구 확대(과기원·일반대 700명, 신진연구 7→27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확대(월 80/110만원), 신규박사우수 장학금(연 750만원) 등

○ (연구기반) 지방·신진 연구자의 연구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풀뿌리 소액연구 신설**(2천개) 등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출연연(47개) 사업군	36,005	41,823	· 국가 대형 임무 과제 100개 추진
- TIPS 사업군	6,412	11,064	· 1,240개 기업에 최대 200억원 지원
- 첨단인력 사업군	9,634	14,386	· 첨단분야 고급인재 2.7 → 3.3만명
- 개인 기초연구	19,053	22,657	· 1억원 미만 과제(0.5~0.8억원), 2천개

【 신산업 】 "100조원+α 국민성장펀드 조성" 6.8→9.1조원

○ (**금융지원**)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금융 지원 강화**

- 5년간 **100조원 이상**의 신규**국민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모태펀드 역대 최대 규모 출자**(1.0→2.0조원) 및 **전략적 투자 강화***를 통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스케일업 적극 뒷받침**

* 신규첨단산업 유니콘 육성(0.6조원), 재창업 기업 재도전(100→800억원) 등

- **첨단산업 특례보증**을 **확대**(4.7→7.5조원)하여 **혁신기업** 자금 공급

○ (**혁신창업**) 첨단산업 특화 트랙 신설, 국내외 오픈이노베이션 및 지역 창업 인프라 확충 등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

- AI·딥테크 신규**특화형 창업패키지***(+175개), 신규**유니콘 브릿지**** 사업(50개사) 신설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AI·딥테크 유망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및 맞춤형 지원(300억원)
** 100억원 이상 선투자 받은 유망기업에 특화지원, 특례보증 패키지(최대200억원)

- **대기업**과 협업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확대**(523→600개)하고, 스타트업 파크(+2개), 공유공장(+2개) 등 **지역 창업인프라 확충**

○ (**기반확보**) 신규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인프라**(85억원)를 조성하고, 신규**이차전지 원자재·소재**(59억원) 평가·실증으로 국내 **공급망 강화**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국민성장펀드	-	10,000	· 5년간 100조원 이상 펀드 조성
- 모태펀드 출자	9,896	19,997	· 첨단산업(0.6조원), 재도전(100→800억원) 등
- 창업패키지	1,538	1,624	· AI·딥테크(신규175개), 투자연계(신규100개)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730	842	· 대기업(170→200개), 글로벌기업(353→400개)
-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	85	· 실증인프라 구축('26~'30, 2개소)

3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강화 1.6→4.3조원

【통상대응】 "대미 관세협상 뒷받침" 0.03→2.1조원

○ (**한·미협력**) 산은·수은·무보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해 조선·반도체 등 **대미 관세협상** 차질없이 뒷받침(1.9조원)

- 조선업 협력을 위해 신규**한·미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중소조선사의 신규**함정 MRO 역량 강화** 등 지원(708억)

○ (**관세피해 지원**) 관세로 인한 피해 분석, 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신규**긴급지원바우처 제공**(약 800개사)

○ (**방산·조선**) 중소조선사 대상 **RG 특례보증**을 **2,000억원 공급**하고, **방산 수출기업 지원펀드** 출자 확대(200→300억)

【수출지원】 "K-유통플랫폼 해외진출 지원 신설" 1.6→2.2조원

○ (**수출기반**) 유망 **내수기업**에 마케팅·R&D 등을 통해 **수출업체**로 **집중 육성**(신규K-수출스타 500)하고, 수출기업의 비용경감 지원

- **(K-수출스타 500)** 유망 내수 중소·중견기업에 마케팅·인증·R&D 등 지원(연 100개사)
- **(수출바우처)** 현지마케팅, 중소 테크·물류 바우처 등 지원물량 확대(4,690→6,394개)
- **(인증·자금)** 해외인증(605→630개사),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770→954개사)

- 신규**유통기업 해외 진출**로 **유망 소비재 동반 수출**도 촉진(500억원)

○ (**공급망**) 첨단전략산업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30~50%)을 지원하여 공급망 안정화 도모

-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 확대(390→710억원) 및 신규**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38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규통상 대응 프로그램	-	19,000	· 산은·수은·무보 등 금융 패키지
- 신규긴급지원바우처	-	424	· 관세대응, 물류비 등 지원바우처 신설
- 신규유통기업 해외진출	-	500	· 유통기업과 유망 소비재 동반수출 촉진
- 소부장 투자보조금	-(추경700)	1,000	· 지원규모 확대(25추경700→1,000억원)

4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가속화 뒷받침 6.0→7.9조원

【에너지 전환】 "RE100 산단·차세대 전력망 구축" 2.8→4.2조원

○ (**신재생에너지**)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융자·보조 대폭 확대**(0.5→0.9조원)

- **RE100 산단, 햇빛·바람연금** 융자지원을 강화(지원율 80→85%)

  - **(해상풍력)** 대규모 사업자 저리융자(+800억원), 보증(+1,000억원) 확대
  - **(영농형태양광)** 유휴농지 매입을 확대(+1,700ha, +0.7조원)하여, 설비투자 기반 확보
  - **(전환지원)** 연탄보조금은 축소하되,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총사업비 1.1조원) 추진

○ (**분산형 전력망**)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규**ESS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0.1조원)

-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신규**전력망 선제 구축**(250억원) 및 신규**마이크로그리드 실증**으로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702억원)

【탄소중립】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 3.1→3.7조원

○ (**산업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201개사) 및 **소규모 사업장 측정기기** 확충(0.7→1.7만개) 등으로 탄소감축 기반 조성

○ (**보급확산**) 신규**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신규**무공해차 인프라 펀드**(0.1조원)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촉진

*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차로 전환 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에너지자립,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0.2조원)

○ (**녹색금융**) 저금리 융자·보증 등 **8.8조원 수준의 정책금융**을 공급(0.8조원)하여 기업의 녹색 투자 활성화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263	6,480	· RE100 산단(120MW), 햇빛연금(100MW) 등
- 신규RE100 산단 전력망	-	250	· 전력망 구축 촉진을 위해 250억원 지원
- 무공해차 보급	22,631	22,825	· 전기차 전환 지원금, 구매융자 신설 등
- 녹색금융 규모 확대	6,448	8,179	· 융자·이차보전 등 정책금융 지원 강화

5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4.2→5.7조원

【K-컬처】 "K-컬처 확산 및 수출강화" 1.3→1.8조원

○ (콘텐츠) **정책금융**, 장르별 **특화지원·인재양성, AI 활용 제작** 등 집중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 뒷받침(0.8→1.2조원)

- **(정책금융)** 문화분야 모태펀드, 전략·글로벌리그 펀드, 융자·보증 확대(0.3→0.5조원)
- **(장르특화)** OTT 특화 장편드라마(8→12편), 중예산영화 제작지원(9→18편)
- **(인력양성)** AI 특화 교육과정 신설(1,000명), 교육과정 융합운영 및 일괄 통합공고
- **(제작지원)** AI 기반 영화·애니·게임·방송·예술작품 등 제작 지원(17→150편)

○ (예술) 뮤지컬·문학 등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 신설(250억원), 순수창작자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노벨문학상** 적극 발굴

- **대형 공연장 임차·제작·공연**(12편) 및 **해외 시범 공연**(13편) 지원, 집필·번역·출판 **문학 해외진출 패키지** 추진(10편)

- 신규**청년 창작자 지원***(3,000명), 신규예술인 **복지금고** 신설(50억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180→280억원) 등 안정적 창작기반 조성

* 작곡가, 희곡·미술작가 등 청년 예술가 대상 연 9백만원의 창작활동금 지원

○ (글로벌 K-컬처 허브) 산재된 **해외문화 기관·사업 통폐합**으로 국외 「**문화수출거점+협업·연계**」 시너지 극대화(0.2→0.3조원)

- **베트남 코리아센터 신축**(90억원), 통합형 **허브 확대**(6→11개소) 등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문화 재외기관 **거점 기지화**

- 고품격 체험·전시 신규**글로벌 홍보관 신설**(11개), 콘텐츠·뷰티·푸드 등 신규**한류연계 융합 지원**(319억원) 및 신규**한국문화 적극 전파**(봉사단 1천명)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	4,650	· 대형 프로젝트 전략펀드 150→ 650억원
- 신규청년 창작자 지원	-	180	· 청년 창작자 3천명, 1인당 9백만원
- 글로벌 K-컬처 허브 구축	1,786	2,627	· 신규글로벌 K-존·융합지원 525억원 · 신규해외 문화봉사단 70억원

【한류 연계 붐업】 "K-관광·푸드·뷰티 등 붐업" 2.3→3.2조원

○ (관광)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래객 유치, 편리한 관광 환경** 조성, **특색있는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 **(외래객)** 국내관광 홍보(20→25개국), 신규K-관광 패스(교통·입장료), 맞춤형 AI 안내
- **(지역관광)**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원)를 환급 해주는 신규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 여행가는달 확대(연 2→3회), 글로벌 관광특구(2개소)

○ (푸드)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全단계 맞춤형** 지원

- **수출바우처 확대**(460→878개사), **융자지원** 강화(0.6→0.7조원), **복합 거점형 물류센터**(50억원) 및 **해외 모방품 대응**(7개소) 지원

○ (뷰티)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지원 및 **생태계 강화**

- **(생산)** 신규제조원료 국산화(50개사) 지원, 안전성 평가 컨설팅 제공(1,200개사)
- **(판매·유통)** 신규컨설팅·마케팅 등 글로벌 진출 통합 프로그램(225억원) 신설, 신규해외 공동물류기지 구축(美 2개소), 플래그쉽 스토어 확대(4→8개소)

○ (제약·의료) 신규**임상3상 특화펀드**(0.2조원) 및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406→295일), **의료 AI 활용모델** 개발·확산(0.2조원)

【문화향유】 "지방 공연·전시 순회 대폭 확대" 0.6→0.7조원

○ (문화패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 인상(14→15만원) 및 **청년문화 패스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장르) 공연·전시→영화 추가, (연령) 19세→19~20세, (금액) 비수도권 +5만원

○ (지역문화)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한 **공연·전시의 지방 순회 약 3배 확대** (공연·전시 400 → 1,200회)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규외래객 K-관광 패스	-	28	· 4만명 대상, 5일권 기준 약 20% 할인
- 신규지역사랑 휴가지원	-	65	· 20개 지자체, 여행경비 50% 지원
-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8	32	· 2개소, 지원 확대(1년간 2억원→2년간 30억원)
- 청년문화패스(지원금)	160	349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등
- 공연·전시 지방 순회	438	1,123	· 공연·전시 400 → 1,200회

['26년 달라지는 모습]

분 야	주요 사업	'25년	'26안
AI	재정지원 규모	3.3조원	10.1조원
	인재 확보	0.8만명	3.8만명
	생활밀접형 AX	-	300개 제품
	고성능 GPU(정부누적)	2.0만장(추경기준)	3.5만장
신산업	R&D 규모	29.6조원	35.3조원
	국민성장펀드	-	100조원 이상 (5년간)
	모태펀드 출자 예산	1.0조원	2.0조원
통상·수출	통상 대응 프로그램	-	1.9조원
	조선업 글로벌 협력	-	708억원
	수출바우처	4,690개	6,394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융자·보조	0.5조원	0.9조원
	전기차 전환지원금	-	최대 100만원
문화	K-콘텐츠 정책펀드	0.3조원	0.5조원
	청년문화패스	(장르) 공연·전시 등 (연령) 19세 (금액) 15만원	(장르) 영화 추가 (연령) 19~20세 (금액) 비수도권+5만원
	공연·전시 지방 순회	400회	1,200회

2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1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전방위 지원 19.0→29.2조원

【 거점국립대 】 "지역전략산업 연계 집중 육성" 0.4→0.9조원

○ (**집중육성**) 거점국립대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집중육성 분야**에 **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지원**('26년 3개교 → 단계적 확대)

*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교당 400억원), AI 지역거점대학(교당 100억원) 등

- **과기원·출연연·기업연구소** 등 역량을 갖춘 지역 기관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지역허브**)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지역 국·사립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교육 협력, 장비 공유** 등 동반성장 도모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3,956	8,733	· 신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억원 · 신규 AI 지역거점대학 300억원 · 거점국립대 교육·혁신 지원 1,922→2,552억원 · 신규 거점대 지역혁신허브화 1,200억원 · 고가연구기자재 162→486억원

【 전략산업 】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 0.3→1.0조원

○ (**지역특화**) **지역별 전략산업**(조선, 에너지, 첨단과학·산업 등)에 기반하여 R&D, 클러스터 조성 등 **특화 지원**

- **(조선·방산, 동남권)** 신규 함정MRO·클러스터(150억원), 신규 K-조선 인재·혁신밸리(62억원)
- **(에너지, 서남권)** 신규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1,196억원), 신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245억원)
- **(휴머노이드, 대경권)** 로봇 실증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R&D)(577억원)
- **(첨단과학·산업, 중부권)** 신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베드(25억원), 신규 첨단소재 AX플랫폼(22억원)

○ (**기반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2,251→2,553억원)하고,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강화**(647→1,772억원)

*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에 대해 ❶보조금 한도 상향(건당150·기업당200→건당·기업당300억원), ❷(現) 대기업은 입지보조금 미지원 → (改) 지방이전 대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❸(現) 신·증설 투자는 입지보조금 미지원 → (改) 입지보조금 지원(중소·중견)

○ (**초광역권**) 지역간 특화산업 연계, 자원 공동 활용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신규**초광역권 사업 발굴·구체화**(50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251	2,553	·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 인센티브 확대
- 신규초광역권 사업 기획	-	50	· 초광역권 사업 발굴·구체화

【 생활여건 】 "의료 · 교통 인프라 확대" 2.3→3.1조원

○ (**의료**)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0.9→1.1조원)

- **(지역의료)**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시설 확충(0.3조원), 신규AI 기반 진료모델(142억원), 취약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확대(10→15억원비수도권)
- **(필수의료)** 신규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융자(0.1조원), 취약지 보조금(191억원)), 중증외상센터 핵심권역(2개)에 대한 치료 인프라 대폭 강화(109억원) 등

○ (**교통·도시**) **광역·도시철도** 적기 구축(1.4→1.7조원)으로 **지역간 연결**을 강화하고, **항공사고 대응***(0.1조원) 등 **안전 투자** 확대

*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3개소(545억원), 조류탐지레이더 6개소(307억원) 등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 착수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 뒷받침(395→1,196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국립대병원 시설·운영	1,908	2,459	· 시설장비 0.2조원, AI 진료모델 142억원
- 지방의료원 시설·운영	1,783	1,815	· 시설장비 0.1조원, 운영비 621억원
-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	1,191	· 융자 0.1조원, 취약지 보조금 191억원
- 세종의사당·집무실	395	1,196	· 대상 부지 매입비, 설계비 반영

【 농어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10.1→11.5조원

○ (**정주여건 개선**)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24만명)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신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0.2조원)

-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국토대청소*** 사업 추진(0.1조원)

* 생활·영농쓰레기 수거(분기별 4천만원) 및 댐쓰레기·해양폐기물 처리 지원

○ (**소득안정**) 수입안정보험, 직불금 확대 등 **농어가소득망 확충**

- **(수입보험)** 평년 수입 일정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9→14개)
- **(수급안정)** 신규수급조절용벼 재배농가 대상 신규 직불금 지원(2만ha, 0.1조원), 민간 RPC 벼 매입자금 확대(1.3→1.4조원), 신규김 계약재배 융자 신설(408억원)

○ (**소비촉진**) "신규**직장인 든든한 한끼***"(79억원)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450→540만명, 201→240개교)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5.4만명) 대상 월 4만원 상당 식비 시범지원

-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 1회 과일 간식** 지급(169억원)

○ (**경쟁력 강화**) AI·데이터 기반 스마트화를 통한 **농어업 체질 개선**

- **(민간 확산)** 신규국가 농어업 AX 플랫폼(807억원), 신규노지 농업 솔루션 확산(1,400농가)
- **(기술개발)** 신규피지컬 AI 농작업 협업로봇(84억원), 신규AI기반 작물 생육 진단(78억원) 등
- **(자금)** 신규스마트팜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0.1조원)

-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76→135개소) 및 신규**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바우처**(825개소) 등 유통구조 개선도 병행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규농어촌 기본소득	-	1,703	· 6개 군(공모) 주민에 월 15만원 지급
- 전략작물직불	2,440	4,196	· 수급조절용벼 등 신규 품목 도입
- 수입안정보험	2,078	2,752	· 감귤, 배추 등 5개 품목 본사업 도입
- 신규초등과일간식	-	169	· 초등 1,2학년 과일 간식 주1회 지원
- 신규직장인 든든한 한끼	-	79	· 월 4만원 상당 식사비 보조 시범사업

2 저출생 · 고령화 대응 62.6→70.4조원

【 저출생 반등 】 "아동수당 지급연령 1세 상향" 32.8→35.8조원

○ (**육아**) **아동수당 연령 상향** 및 **지역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① (**지급연령**) **만 7→8세 이하**로 +1세 확대

② (**지원금**)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11**/특별**12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은 +1만원 → 최대 **12~13만원**)

- **다자녀·장애인가구** 기저귀·분유 **지원대상 3.5만명 확대**(중위 80→100%)
- **독감**(13→14세 이하)·**HPV**(12세 남성 추가) 등 **무료예방접종** 확대

○ (**돌봄**) **아이돌봄 지원확대**(중위 200→250%), **사각지대 보완**

- (**취약계층**) 한부모·장애 등 취약계층 **돌봄시간 960→1,080h/연** 확대
  인구감소지역 신규**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사각지대**) 심야 돌봄 공백 해소 위한 신규**야간 긴급돌봄 수당 5,000원/일** 신설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를 **영유아특별회계**(0~5세)로 **확대·개편**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강화**

- (**교육여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4~5세), 신규**0세반 교사비율 개선**(1:3→1:2)
- (**사각지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신규**오전 08시 이전 틈새돌봄 지원**(365억원)

○ (**일가정양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상한220→250만원)으로 근로자 지원,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확대***로 사업주 부담 경감

* (대체인력지원금) 월120→130~영세140만원, (업무분담지원금) 월20→40~영세60만원

○ (**주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2.8→3.1만호),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육아친화플랫폼 10개소** 조성(76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아동수당	19,588	24,822	· 지급대상 7세 → 8세 이하 확대
- 아이돌봄	4,750	6,003	· 중위소득 200→250%, 돌봄시간 확대
-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 (예비비 1,289)	4,703	· 지급대상 5세 → 4-5세로 확대
- 모성보호육아지원	40,225	40,728	· 육아기근로지원금 220→250만원 상향

【 미래세대 】 "청년미래적금 신설" 4.2→7.1조원

○ (**자산형성**) 신규**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

* 만 19~34세 청년(소득 6,000만원 이하) 대상 납입금(50만원 한도)의 6/12%를 매칭

○ (**일자리**) 신규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직 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 **신설** (인구감소지역 우대) 및 **구직촉진수당 상향**(50→60만원)

* (비수도권)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600만원, 특별지역 720만원

○ (**주거**) 저소득 청년에 **월세 지원**(월 20만원, 24개월)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2.7→3.5만호)하여 주거안정 지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규청년미래적금	-	7,446	· 월 납입한도 50만원, 정부 매칭 6/12%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2	9,080	· 비수도권 취업청년 근속 인센티브(894억원)
- 청년월세지원	777	1,300	· 신규 6만명, 계속 12.7만명 지원

【 고령화 대응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25.6→27.5조원

○ (**돌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확산 지원(71→777억원)

*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 사업비(4~10억원국비+지방비) 차등 지원

○ (**소득**) **노인일자리**를 **확대**(+5만명)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 **전환**

- 신규**고령자통합장려금** 신설 및 비수도권 월 10만원 추가지원

○ (**재산관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 등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도입(750명 목표)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지역사회 통합돌봄	71	777	·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 노인일자리	21,847	23,851	· 노인일자리 110→115만개 확대
- 고령자통합장려금	-	107	· 월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계속고용시)
- 기초연금	218,146	233,627	· 기초연금 月 34.3→34.9만원 인상

【 주요 청년지원 예산 】

사업명	지원 내용	'26예산안 (억원)
①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약계층(1유형) **구직촉진수당 확대**(50→60만원), **지원대상 확대**(1유형 +2.7만명, 2유형 +1.8만명)	10,128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비수도권 취업청년**(중소기업) 5만명 대상 **근속 인센티브** 신설(2년간 480~720만원) 등	9,080
청년창업사관학교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과정 확대**(60→100개), **AI·딥테크 특화과정 신설**(+200개)	1,025
신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500팀** 대상으로 **창업자금** 등 지원	300
② 주거·자산형성		
신규 청년미래적금	· 연 6,000만원 이하, 중위 200% 이하 청년 대상 **청년미래적금 신설**(납입금의 6/12% 매칭지원)	7,446
청년 공공임대	· **청년 공공임대 확대**(2.7→3.5만호, +0.8만호)	42,831
청년 월세지원	·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원 월세지원 상시화**	1,300
③ 교육(직업훈련 포함)		
신규 Top-tier(탑티어) AI 융복합 과정	· 선도기업 및 우수대학이 참여하는 최고 수준의 **AI 실무인재 양성 과정 신설**(+1만명)	1,338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 **대학·기업**이 **공동 개발·운영**하는 학부 대상 **단기집중 교육과정 대폭 확대** * (AI) 신규 40개, (로봇) 신규 2개, (미래차) 2→4개	1,342
신규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트랙	· **학부-대학원-박사후 국내 정착**까지 **체계적 성장트랙** 제공(학부 2~4학년 400명, 연 2천만원)	85
④ 복지·기타		
천원의 아침밥	· **대학생** 대상 **아침밥** 제공 **확대**(450→540만식)	111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대상 대상 **확대**(1,000→2,000명)	50
신규 경계선지능청년 일자리 지원	· 경계선지능청년 200명 대상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참여수당 20만원 지급)	3

3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29.2→32.1조원

【저소득층】 "4인가구 생계급여 200만원 돌파" 21.0→23.1조원

○ (**기초생보**)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인상

-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수급액 200만원 초과**(195.1 →207.8만원)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신규**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200개소) 등 의료급여 대폭 확대(8.7→9.8조원)

*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주거·교육)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4.7~11%** 상향(+1.7~3.9만원/월), **고교생 12% 인상**(+9.2만원) 등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초등생) 연 48.7→50.2만원, (중학생) 연 67.9→69.9만원, (고교생) 연 76.8→86.0만원

○ (**바우처**) **농식품바우처**(1인 가구 월 4만원) 대상에 **청년** 가구 포함*

*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 포함 가구

-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다자녀가구까지 확대**(+2만 가구)하고, 미사용·저사용 가구에 신규**찾아가는 안내서비스**로 사각지대 해소

○ (**보험료**)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73.6만명)의 신규**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월 최대 3.8만원)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기초생활보장	203,802	224,146	· 기준중위소득 역대최대(6.51%) 인상
· 생계급여	84,900	91,727	· 195.1→207.8만원(4인 가구)
· 의료급여	86,882	98,400	· 부양비 폐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 주거급여	30,368	32,309	· 기준임대로 4.7~11% 상향
· 교육급여	1,652	1,711	· 교육활동비 평균 6% 인상
- 농식품바우처	381	740	· 생계급여 수급 청년 가구 대상 추가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824	· 73.6만명, 최대 3.8만원/월(12개월) 지원

* '25년 국민연금 납부재개자 대상 보험료 지원 예산 519억원

【 장애인 】 "주간활동 · 일자리 지원 확대" 6.8→7.4조원

○ (**돌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2→**1.5만명**으로 **확대**(2,222→2,848억원)

-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보미 전문수당**을 **3배** 상향(월 5→15만원)하고, **지원 단가 인상**(일반지원의 150→170%)
- 장애 조기발견·지원을 위한 신규**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립**(17개소, 59억원) 및 **중증 장애아동 돌봄시간** 확대(1,080→1,200시간)
- **발달장애인·장애아** 가족 **휴식프로그램 확대**(1.5→1.9만명)

○ (**소득**) **장애인 일자리**를 **2,300개** 확충(3.4→3.6만개)하고, **중증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을 인상(월 10→13만원)하여 소득기반 확보

-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다변화***를 위한 신규품목 **인큐베이팅 확대**(3→5개소)

* 예: (기존) A4용지 등 → (개선) 운동매트, 다회용컵 대여서비스 등

【 한부모 】 "한부모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0.58→0.6조원

○ (**양육비**) 한부모 양육비(월 23만원)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65%** **확대**하여 1만명(25→26만명) 추가 지원(+194억원)

- **조손가족, 미혼모·부** 등 **추가양육비** 지원 확대(월 5→10만원)

○ (**돌봄**) **미혼모·부, 조손가정**에 출산·양육 등 지원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업 지원 가족센터 6개소 추가**(+6억원)

- 한부모복지시설 입소 가족 **생활보조금 인상**(월 5→10만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장애인 활동지원	25,323	28,102	· 지원인원(13.3→14.0만명)
- 발달장애인 지원	4,030	4,810	· 주간활동서비스 인원(1.2→1.5만명) 최중증 돌보미 전문수당(5→15만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5,528	5,722	· 중위소득 63→65% 이하

【 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0.7→0.8조원

○ (**위기가구**) 위기가구 누구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고, **단전·연체** 등 정보와 **AI**를 활용해 **사각지대 해소**

- **(생필품)** 최초 방문시 기본 생필품(2~3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2회 이상 방문시 상담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연계하는 신규전국민 기본보장 코너 신설(130개소)
- **(긴급복지)**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구 생계비·의료비 지원(3,501→4,053억원)
- **(사각지대)** AI 기반 위기가구 선제발굴 시범사업(AI콜을 통해 고위험가구 선별)

○ (**청년·청소년**)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원) 대상 확대(4→8개 시도)

- **가정밖 청소년**의 **사회 진입**을 위한 신규**사전훈련**(3개소)을 신규 지원하고, 인문·문화 등 신규**청소년 그룹활동** 지원(1,020팀)

○ (**여성**)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새일센터 신규**지역주도형 직업훈련** 신설(99억원), 호신용 스프레이 등 신규**스토킹피해자 안심장비** 보급

- 신규**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7억원)

【 심리안정 】 "자살예방 전담인력 2배수준 확대" 0.2→0.22조원

○ (**자살위험군**)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668→1,275명)하고, 고위험군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현행) 비청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 (개편) 소득요건 폐지

- **유가족 심리·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81억원)하고, 신규**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1 상담**(1,300명) 신설

* 상담, 상속·시체검안 등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등 경제 지원

○ (**트라우마**) 산불 등 **재난피해자 트라우마 극복**(58억원) 뒷받침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신규생필품 보장코너	-	50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 무료 지원
- 긴급복지	3,501	4,053	·생계지원 대상 33.1→37.5만건 확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562	708	·고위험군 치료비·사후관리 강화 등

4 민생경제 회복,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17.6→26.2조원

【 민생회복 】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17.1→23.7조원

○ (**서민금융**)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에 **햇살론 6조원** 공급, **상품구조 개편*** 및 **취급창구 확대****를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 기존 5개 상품(5.95조원) → 햇살론 일반/특례/유스 3개 상품으로 통합(6조원)
** (기존) 은행·저축은행별 취급상품 상이 → (개편) 취급은행 확대 및 모든 상품 제공

○ (**교통비**)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지하철·버스)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신규**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 지하철·버스 :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5.5만원, (일반) 6.2만원
GTX·광역버스 포함시 :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9만원, (일반) 10만원

- 기존 K-패스 환급지원도 **어르신 대상 환급률 상향**

* 일반 20%, 청년 30%, 3자녀 50%, 저소득층 53%, 어르신 20→30%

○ (**주거**)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4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30년까지 110만호 공급)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햇살론 특례·유스	3,424	4,500	· 서민금융 공급규모 5.95→6.0조원
- 대중교통비 환급	2,375	5274	· 정액패스 신설(일반 6.2 청년등 5.5만원)
- 공적주택 사업군	165,170	227,701	· 공적주택 공급 18.1→19.4만호

【 소상공인 】 "25만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0.4→2.3조원

○ (**경영안정**) 연매출 1.04억 미만 소상공인(230만개사) 대상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 지급**(0.6조원)

○ (**매출신장**)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국비보조율 상향***(1.15조원)

* (수도권)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 규모**인 **4.5조원** 발행(0.4조원)

○ (**경쟁력 강화**) 민관협업으로 **지역상권**을 **혁신**하고, 신규**수출지원·AI교육 신설** 및 **온라인 진출지원**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

- **(지역상권)** 민간 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전국 66개 상권 규모별 최대 50억원 지원
- **(수출)** 신규유망 소상공인 100개사 대상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지원
- **(디지털화)** 신규AI 교육·컨설팅·상품화 지원(0.2만개), 온라인 플랫폼 연계 확대(0.3→0.4만개)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경영안정바우처	- (추경15,660)	5,790	· 25만원 바우처(공과금·보험료 등)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 (추경10,000)	11,500	· 24조원 발행지원 + 국비지원율 상향
- 온누리상품권	3,907	4,580	· 디지털 4.5조원 + 지류 1.0조원 발행
- 경쟁력 강화 사업군	150	419	· 수출·AI·온라인 3종 경쟁력 강화지원

【 사회연대경제 】 "마을기업 · 협동조합 성장자금" 0.1→0.2조원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창업, 취약계층 고용, 판로개척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지자체 협업형** 사회문제 해결 모델 **신규 도입**

- **(창업)** 신규사회적기업 창업희망 500팀 대상 창업자금 제공(300억원)
- **(채용)** 신규취약계층 고용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최대 3년간 월 50~90만원) 지원(321억원)
- **(협업)** 신규사회적기업·지자체 협업을 통한 일자리매칭 등 지역 문제해결 지원(137억원)

○ (**성장지원**) 우수 **협동조합**(60개사) 대상 사업화자금 등 **단계별 패키지 지원** 및 신규**마을기업** 대상 **성장자금 지원**(130개사)

- **(협동조합)** 신규경제성 있는 유망조합(도약단계 30개) → 진단·교육·컨설팅 지원
  신규수익 발생하고 있는 우수조합(고도화 단계 30개) → 사업화자금 지원 등(31억원)
- **(마을기업)** 신규 지정 130개사 대상 5천만원 성장자금 지원 등(53억원)

○ (**공정경제**) 공정거래 관련 조사인력 등을 **대폭 증원**하고, AI 활용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신규**소비자 피해방지**(2억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사회적기업 지원	284	1,180	· 창업자금 지원(500팀), 지역사회 문제해결
- 마을기업 육성사업	17	53	· 마을기업 130개선발, 사업화자금 지원

5 산재예방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 16.0→17.6조원

【안전한 사업장】 "산재 예방시설 · 안전인력 투자 강화" 1.3→1.5조원

○ (**예방투자 확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건설현장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 대폭 확충**(1.1→1.7만개소)

* 추락 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등 방지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등

- **산재예방 융자**(2,600→3,054개소), **안전컨설팅**(+1,500개소)을 **확대**하고, 신규**지자체 협업 프로그램*** 신설 등 전방위 안전관리체계 구축

*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10개 지자체 선정(공모) → 산재예방 프로그램 운영

○ (**안전점검 강화**) 신규**일터지킴이 1,000명**을 선발하여 주요 업종(건설·조선업 등) 대상 상시 점검을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

- 신규**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일터 안전 인식확산 기여

*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50만원), 산재 은폐 등(500만원) 신고시 포상금 지급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818	5,371	· 영세사업장 등 시설지원(1.7만 개소) 등 - (50인 미만등, 보조 최대 80%) 11,865개소 - (10인 미만등, 보조 최대 90%) 5,593개소
- 산재예방시설 융자	4,588	5,388	· 융자지원 물량 확대(2,600→3,054개소)
- 안전보건 컨설팅	637	820	· 컨설팅 물량 확대(3.35→3.5만개소)
- 신규안전한 일터지킴이	-	446	· 일터 지킴이 1천명(직접 800+위촉 200명)
- 신규신고 포상금	-	111	· 규칙 위반(50만원), 고의적 법 위반(500만원)

【권익보장】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2.3→2.8조원

○ (**취약노동자 보호**)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3→6개월)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보장 강화(+0.2조원)

- 신규**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및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충**(+2개소) 등 취약노동자 현안 대응

* 의무고용률 이행 촉진을 위해 50~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35~45만원 장려금 지급

** 외국인 근로자 대상 다국어 상담, 한국어교육, 지역별 특화 서비스 등 수행

○ (**근로복지 증진**) 중소기업 대상 **주 4.5일제 도입 컨설팅 지원** 및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촉진

- **(도입장려금)** 신규주 4.5일제 도입사업장에 월 20~50만원 장려금 지급
- **(고용창출장려금)** 신규주 4.5일제 도입 후 신규 고용시 60~80만원 장려금 지급
- **(기반확보)** 신규육아기 10시출근제(0.2만명), 일터혁신상생컨설팅(200개소 추가)

○ (**근로감독 강화**) **근로·산업안전감독관 증원**(+2천명), **AI 노동법 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체불임금 대지급	5,293	7,465	·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도산시 최대 6개월)
- 장애인 근로지원인	2,470	2,659	· 근로지원인 확대(11,000→11,500명)
- 신규워라밸+4.5 프로젝트	-	277	· 주 4.5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257억원) · 주 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20억원)
- 신규육아기 10시출근제	-	3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 100% 보전 사업주 지원(월 30만원, 0.2만명)
- 근로감독관 업무지원	172	1,126	· 신규 근로감독관 업무지원

【 고용안전망 】 "구직촉진수당 50→60만원" 12.4→13.3조원

○ (**구직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확대(30.5→35.0만명)하고,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50→60만원)으로 취약계층 구직활동 지원

- 은퇴계층 대상 신규**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도입(0.1만명)

* 특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은퇴계층이 구인난 업종 취업시 최대 360만원 지급

○ (**실업자 보호**) **구직급여**(161.1→163.5만명) 및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확대(0.3→0.4만명)를 통해 실업자를 두텁게 보호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8,457	10,129	· 구직촉진수당 월 50→60만원 등
- 구직급여	109,171	115,376	· 지급단가 +2.9%, 지원인원 확대 등
- 신규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	18	· 은퇴 중장년 연 0.1만명 대상

[’26년 달라지는 모습]

분 야	주요 사업	’25년	’26안
지방 성장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0.4조원	0.9조원
	농어촌 기본소득	-	월 15만원 (6개 군, 시범)
	직장인 든든한 한끼	-	5.4만명
저출생·고령화	아동수당	(연령) 7세 이하 (금액) 월 10만원	(연령) 8세 이하 (금액) 비수도권 최대 3만원 추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5세	4~5세
	청년미래적금	-	납입금의 6/12%
사회안전매트	생계급여(4인가구)	월 195.1만원	월 207.8만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12개(시범사업)	전국 확대
	한부모 양육비	중위소득 63%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보장 코너	-	130개소
민생경제	대중교통 정액패스	-	일반 월 6.2만원 청년·노인 월 5.5만원
	공적주택 공급	18.1만호	19.4만호
	지역사랑상품권	- (추경 1.0조원)	1.15조원 (24조원 발행 지원)
노동	산업재해 안전장비 지원	1.1만개 사업장 (보조율 최대 80%)	1.7만개 사업장 (보조율 최대 90%)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3개월	6개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월 60만원

3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 · 안보

1 재난 예측 · 예방 ·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3.9→5.8조원

【 재해 · 재난 】 "재해위험지역 정비 확대" 3.7→5.5조원

○ (**예측**) **AI·드론**을 활용하여 **재해·재난 예측력**을 강화

- 신규**한국형 기상모델**(27억원)을 개발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홍수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 확대**(+40개소)

-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신규**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34억원)

○ (**예방·대응**) **호우·산불·싱크홀** 등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

- **(호우)** 재해위험지역 정비(0.9→1.1조원), 지능형 CCTV 국가하천 숚구간 설치(+1,000개소), 모든 상습침수지역에 신규맨홀 추락방지시설(21만개) 설치 지원
- **(산불·화재)** 지능형 산불 감시카메라(+120대, '29년 목표 조기달성), 신규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456개소), 신규중용량포 방사시스템(4대), 신규화재 연기감지기(50만 세대)
- **(싱크홀)** 노후하수관로 개량(0.3조원), 싱크홀 지반탐사 장비 구입(+19대)

- 경찰·소방 등 고위험 직종 **위험근무수당**을 **인상**(월 7→8만원)하고, 재난안전 담당공무원 신규**격무·정근 가산금** 신설(각 월 5만원)

○ (**복구·관리**) 재난 현장에 신규**원스톱 피해자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신규**국민안전펀드 200억원 조성**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AI홍수예보 시설 구축	95	215	· 수위관측소 신규 40개소 신설
-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	10,546	· 풍수해생활권 정비 신규지구 41개소
- 하수관로 정비	3,471	3,652	· 침수우려지역 92개소 보수·정비 등
- 신규피해자 통합지원	-	2	· 재난현장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 신규국민안전펀드	-	100	· 민간자본 포함하여, 총 200억원 조성
- 재해·재난대책비	9,270	20,093	· 피해지원 항목 확대 및 기준 상향

【 민생범죄 】 "신임경찰 충원 확대" 0.2→0.3조원

○ (**수사지원**) 경찰인력 충원 대폭 확대(4,800→6,400명) 및 저위험 권총·외근 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 강화

- **(AI기반)** 신규온라인 사제총기 위험정보 감시체계(9억원), CCTV 영상분석(28억원) AI를 활용한 신규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구축(7억원)
- **(인력·장비)** 신임경찰 충원 확대(4,800→6,400명) 및 저위험권총(7,746정), 차세대 외근 조끼(7,765벌) 보급, 무도실무관 바디캠 확충 등 현장대응 인력·장비 확충
- **(생활범죄)** 법무부-경찰 스토킹 위치추적 시스템 연계강화, 신규경찰사칭 통신사 인증 발신 정보 표시(9억원),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확인(찐센터) 보강(9억원)

○ (**피해자보호**) 취약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범죄 피해구조금**을 개편*하고, 경상피해자 대상 신규**긴급생활안정비** 도입

* 자녀·손자 사망시 월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24개월분 보장 등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보장을 위해 **스마일센터**(범죄피해자심리치유 전문기관) **야간·주말 운영 확대**

○ (**권리구제**) 형사피고인 **국선전담 변호인**을 **증원**(254→274명)

- **회생법원 추가 신설**(3→6개소) 및 **통합도산지원센터** 운영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약자의 **빠른 재기 지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AI기반 수사역량강화	15	88	· SNS마약채널(7억원), CCTV분석(28억원), 정신질환행동분석(21억원) 등
- 현장대응 인력·장비 확충	433	729	· 신임경찰 충원 확대(4,800→6,400명), 저위험 권총·차세대 외근조끼 보급 등
- 생활범죄 근절	372	587	· 법무부-경찰청 스토킹 112시스템 연계 등
- 피해자 보호	224	310	· 범죄피해구조금 개편, 스마일센터 심리치료 운영 야간주말 확대 등
- 권리구제	1,000	1,387	· 국선변호인 증원, 회생법원 추가신설 등

2 군 자긍심 고취, 첨단군대 육성 20.4→22.8조원

【 장병복지 】 "초급간부 처우개선 3종 세트" 14.4→15.1조원

○ (**간부**) 보수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자산형성 등 **초급간부** 대상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 **(보수)** 5년미만 초급간부(하사·중사, 소위·중위) 대상 최대6.6% 수준 보수 인상(3.5%+3.1%)
-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장려금·장려수당 지원대상 확대(민간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
- **(신규내일준비적금)** 장기복무자(장기전환 포함) 대상 3년간 1,080만원(월 30만원) 매칭 지원

- **당직비**(평일 2→3만원 / 휴일 4→6만원), 전투역량강화비(+3.2%), **주임원사 활동비**(월 30→35만원) 인상 등 복무여건 개선

○ (**장병**) 3년간 동결되었던 **급식단가**를 인상(1.3→1.4만원/일)하고, **지역상생 자율특식**을 **2배 확대**(4회+자율 중·특식)하여 급식의 질 제고

- 전방부대 위주로 보급되었던 **신형 전투피복**을 **전부대로 확대**(0.1조원)하고, 구형 **전투차량**을 **신형으로 본격 교체**(211→729대)

- 병 자기개발을 위한 **원격강좌**(3→4만명)·신규**e북 지원**을 **확대**하고, **전장병 AI**(409억원)·**드론**(190억원) **교육** 등 인프라 조성

○ (**예비군**) **동원훈련비 및 도시락비** 인상*, 신규**기본·작계훈련비**를 **신설**(1만원)하여 예비군 훈련 보상 확대

* (동원Ⅰ) 8.2→9.5만원, (동원Ⅱ) 4→5만원, (도시락비) 8→9천원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간부확보장려사업	934	1,668	· 신규장기복무자 적금,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등
- 부대운영지원	2,202	2,660	· 당직비, 전투역량강화비 인상 등
- 기본급식	16,844	18,057	· 급식단가 인상, 지역상생자율특식 확대 등
- 일반훈련	739	968	· 기본·작계훈련비 신설, 도시락비 인상 등

【 전력증강 】 "전투기 · AI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 1.8→3.2조원

○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보라매**(KF-21) **최초 개발·양산**(신규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포함, 1.3→2.4조원)을 차질없이 지원

- 축적된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여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스텔스 브릿지, 구조·소재·센서 3대기능) **착수**(신규636억원)

○ (**첨단무기**)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등 투자 확대(0.5→0.8조원) 및 민간 우수 기술 활용 **피지컬 드론·로봇 연구개발 착수**(신규418억원)

○ (**K-방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육성·해외진출** 등 생태계 구축으로 **K-방산 4대 강국 발판 마련**(0.3→0.5조)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12,533	24,284	· 보라매 양산·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연구 등
- AI·드론·로봇 등	4,612	7,608	· 미래전 대비 최첨단 무기체계 전환
- K-방산 육성	3,326	4,728	· 방산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수출지원 등

【 보훈 】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신설" 4.3→4.5조원

○ (**보훈급여**) **보훈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45→48만원), 무공영예수당(51~53→54~56만원) 등 **+3만원 정액 인상**

- 신규**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월 10만원)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을 **7급 재해군경**까지 확대하여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의료지원**) **보훈위탁병원**을 **확대**(연 +200개, '30년까지 2천개)하고, 신규**준보훈병원***을 새로 도입하여 **보훈의료 사각지대 축소**

*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보훈급여군 사업	50,816	51,998	· 보상금 · 수당 단가 인상, 지원대상 확대 등
- 보훈 · 위탁병원 진료	6,414	7,200	· 위탁병원 확대, 준보훈병원 도입 등

3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7.4→6.4조원

【 실용외교 】 "국익 연계 ODA로 개편" 6.6→5.4조원

○ (ODA)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지원***,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등 **사업 정상화**

* 인도적지원 : ('23) 2,994 → ('24) 7,401 → ('25) 6,775 → ('26안) 3,315억원
재량분담금 : ('23) 2,767 → ('24) 3,016 → ('25) 3,833 → ('26안) 2,807억원

- 우리 산업 수요와 연계한 신규**개도국 기술인재 양성 지원**(68억원), 철도차량 공급, 랜드마크 건설 등 **양자 차관**(1.4→1.6조원)은 확대

○ (실용외교) **새정부 외교전략 수립** 및 **국제행사**(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77억원)를 지원하고, **공공외교 활성화***로 국가 이미지 제고

* 현지 수요에 맞는 문화·학술 교류 및 외교정책 홍보 추진(225→256억원)

○ (재외동포) 신규해외 **동포청년** 400명 대상 학업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차세대 인재의 **국내 유치·정착** 유도

* (학업지원, 150명) 등록금 50%, 어학연수, 학업장려금 등
(취업지원, 250명) 직업교육 훈련비(60만원/인), 자격증 취득비, 정착금 등

【 한반도 평화 】 "남북협력기금 1조원으로 확대" 0.8→1.0조원

○ (남북협력) 민생·경제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확대**(0.8→1.0조)

○ (사회적대화) 신규**사회적 통일대화 기구 구성·운영**(25억원),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안정지원**(상담센터 1→2개소) **강화**

(단위: 억원)

	'25년	'26안	비고
- ODA	65,835	53,573	·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
- 공공외교 등	304	332	· 지역전략, 국제행사, 공공외교 지원
- 재외동포 인재 유치·정착	-	31	· 신규학업지원 150명, 취업지원 250명
- 남북협력기금	7,981	10,003	· 한반도 평화 및 남북 간 관계 개선 대비

[’26년 달라지는 모습]

분 야	주요 사업	’25년	’26안
재해 대응	재해위험지역 정비	0.9조원	1.1조원
	신규 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	50만 세대 (노후아파트)
	신규 맨홀 추락방지시설	–	21만개소 (모든 상습침수지역)
	지능형 산불 감시카메라	256대	376대 (’29년 목표 조기 달성)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7만원/월	8만원/월
	국가하천 지능형 CCTV	–	+1,000개소 (전구간 도입)
민생범죄	신임경찰 충원	4,800명	6,400명
	긴급생활안정비	–	300만원 수준
	회생법원	3개소	6개소
국방·통일	신규 초급간부 내일준비적금	–	1,080만원 (3년간)
	당직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군 급식단가	1.3만원/일	1.4만원/일
	장병 AI 교육	3만명	47만명 (전 장병)
	신규 참전유공배우자 생계지원금	–	1.7만명 (월10만원)
	남북협력기금	0.8조원	1.0조원

3. 정부조직 개편 주요 변동사항 (행정안전부)

◇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

Ⅰ. 개편 방향

□ 추진 배경

○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및 핵심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 수행체계 기틀 마련**

○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에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첫 단계**로 **정부 조직개편**

○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 정상화** 및 문제점 개선,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개편**

□ 개편 방향

○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

○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 **전면 재조정**

○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및 **경제성장·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담부처 역할 강화**

Ⅱ. 개편 내용

1.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 '26.1.2. 시행

□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신설

○ **균형적 예산편성** 및 배분,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

○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등 기능 ⇒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개편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여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능 강화***

* 재경부장관·민간 공동위원장, 상임위원(고위가급) 신설, 사무국 신설(공공정책국 이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환경부를 **환경·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산업부 제2차관 이관*)

*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존치,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

○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이관**(←기재부)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및 **기능 강화**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분산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 기능 이관)

○ 위원정수를 5인(상임 5)에서 **7인**(상임 3, 비상임 4)으로 개편하여 **공영성 강화**

○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 **논의**

4.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 검찰청 폐지 ⇒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주요방향** 및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

* **공소 제기·유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 등 수사를 위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 도출**

5.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 **과학기술** 및 **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과기정통부장관 겸임)하고,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실) 설치

*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

○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소속)' 개편('25.9.4. 시행)

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 제2차관(소상공인 전담)

○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제1차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 담당)

○ 전담차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육성**(창업 촉진, 판로 확보 등)과 **보호**(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고용노동부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 ⇒ 차관급 본부 격상

○ 현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실장급)를 격상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 신설

○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정책 전담 실 신설, 산재예방감독 기능 확대 등 강화

8.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소속)」로 격상

○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

○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 등을 강화

9.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개편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

○ **경제활동 촉진, 종합적 균형고용** 정책 및 **여성안전 강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기능**을 **보강**

10.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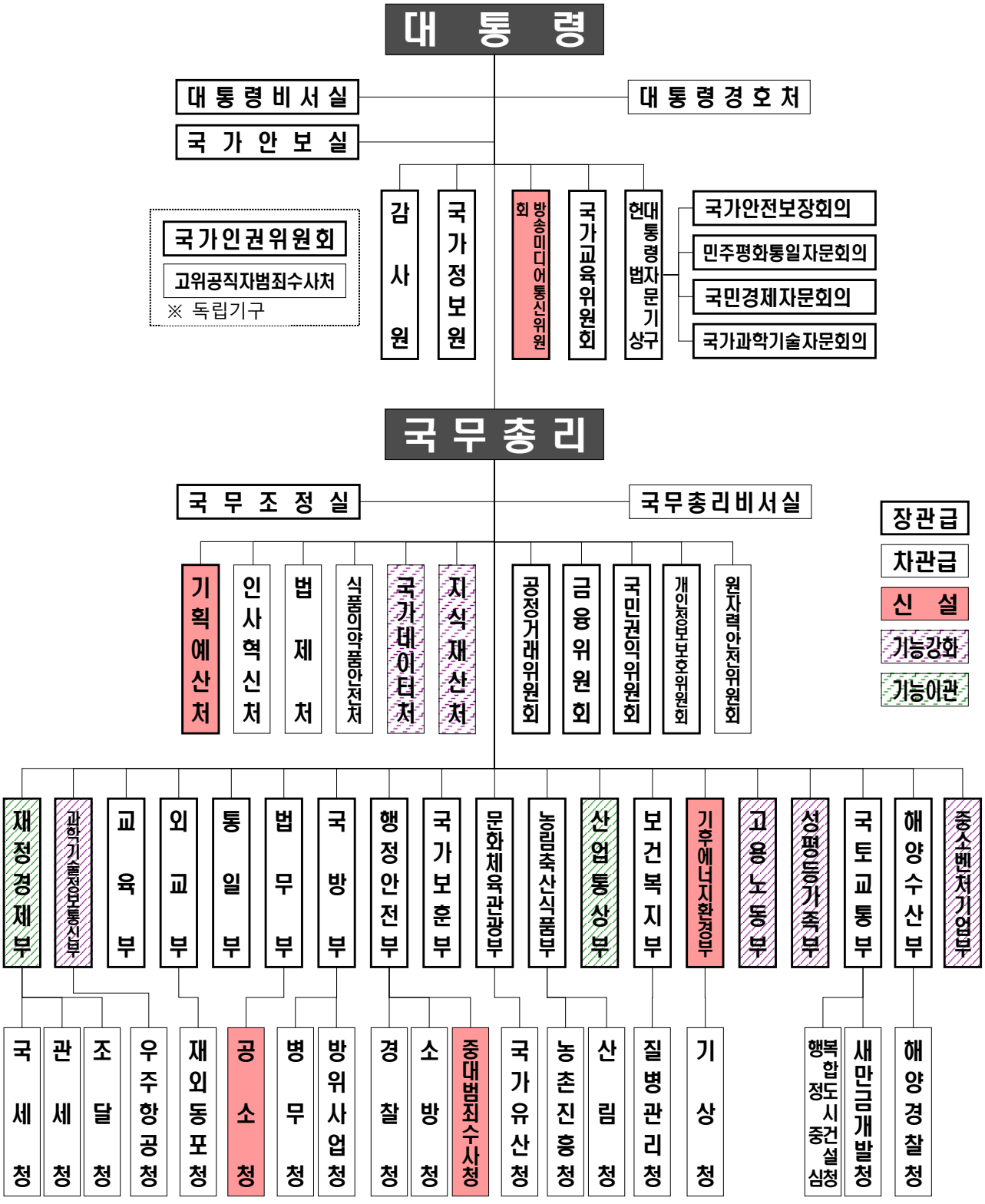
□ 특허청 ⇒ 「지식재산처(국무총리 소속)」로 격상

○ 지식재산의 **총괄·조정 관리** 및 정책 수립,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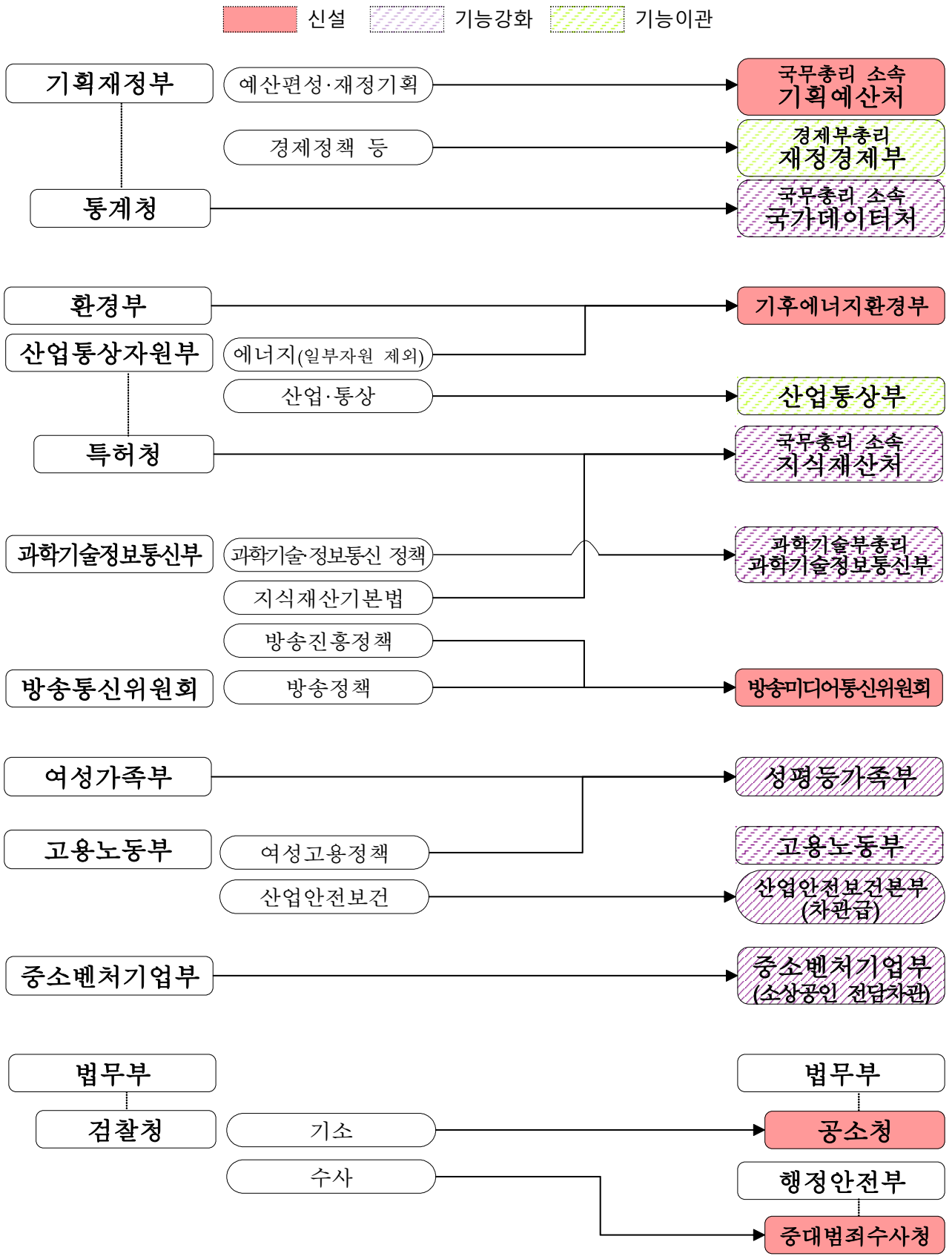
○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보호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참고 1 개편 후 정부 기구도

※ (중앙행정기관)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 ⇒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 +3처△1청)



참고 2 개편 후 정부 기구도



4.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
◇ **시행 기간은 '25.9.29. ~ '26.6.30. (약 9개월)**

1 추진배경

○ '24.12.26.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래객 출입국 편의 증진으로 방한시장 확대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한시 무사증 제도 시범 시행 적극 검토" 발표

○ '25.3.20.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3분기 중 시행" 발표

○ '25.8.6.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25.9.29. 시행" 발표

2 적용 대상 등

○ 전담여행사 모객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

○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 현지 전담여행사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가 여행객 모집 주관

<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외 대상 >

ㅇ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거나,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로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은 제외

* 중국인은 무사증으로 30일간 제주도 체류 가능 (제주도 한정)

** 인천·김해공항 등 내륙공항으로 입국, 내륙에서 체류 (5일 이내) 후 제주 방문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15일 체류 가능)

○ 적용지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며, 체류 자격, 체류 기간은 관광·통과(B-2 비자), 15일임

3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 국내 전담여행사 등록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내 전담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등록을 희망할 경우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전담여행사 등록 신청

  *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담여행사 지정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전담직원 재직증명서 및 대표의 위임장

-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해당 여행사에 '등록 신청 결과 및 하이코리아 가입' 안내

○ 국외 전담여행사 지정

- 주중대한민국공관(주중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 중에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전담여행사' 지정을 희망할 경우 관련 서류* 첨부하여 관할 주중대한민국공관에 신청

  * 지정 신청서, 영업집조, 국제여행사 업무경영허가증

- 주중공관장은 법무부 출입국기관에 전담여행사 지정 요청 사항 통보

-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지정 결과를 해당 주중공관 및 여행사에 통보

4 단체 명단 등재 및 입·출국 절차

❶ 단체명단 등재	⇨	❷ 사전 점검	⇨	❸ 결과 통보	⇨	❹ 입·출국
국내 전담여행사가 하이코리아*를 통해 단체명단 등재 * www.hikorea.go.kr		입국규제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 점검 (출입국기관)		국내 전담여행사에 사전 점검 결과 통보 (출입국기관)		동일 항공·선박편으로 입·출국

○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국내 전담여행사)

-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입국 36시간 전)까지 단체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일괄 등재

○ 사전 점검 및 결과 통보 (출입국기관)

-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국내 전담여행사가 등재한 단체관광객 명단에 대해 입국규제 여부 등 확인

-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단체관광객 명단에 대한 점검 결과를 단체관광객 입국 12시간 전 (선박 이용 시 입국 24시간 전)까지 하이코리아를 통해 국내 전담여행사에 통보

※ 국내 전담여행사는 하이코리아에서 단체여행객 명단 확인 및 출력 가능

○ 입 · 출국 절차

- 단체관광객 구성원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공항만의 출입국심사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입 · 출국

- 단체관광객은 동일 항공 · 선박편으로 입국 및 출국 원칙

5 불법체류 등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단체관광객 명단을 대상으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 사전 점검 → 고위험군은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토록 안내)

○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국내 전담여행사]

- (지정 기준 강화) 무단이탈로 인한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 갱신 지정 시 감점하여 평가에 반영, 무단이탈로 인한 지정 취소 시 2년간 신규 지정 불가

- (제재 기준 강화) 단체관광객 이탈 방지 및 전담여행사 실효적 관리를 위한 행정제재 기준 강화

※ 고의나 공모에 의한 관광객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정취소

※ 지정취소 기준을 분기별 평균 이탈률 5% (기존 취소 기준) → 2%로 강화

- (전담여행사 관리 · 교육 강화) 저가관광 · 쇼핑강요 금지, 단체관광객 인솔 시 유의사항, 이탈 발생 방지 노력 등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국외 전담여행사]

- (지정 기준 강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대행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 제외
- (제재 기준 강화) 분기별 평균 이탈률 2% 이상 시 지정취소

※ 분기별 평균 이탈률에 따라 단계별 행정제재 : 시정명령(0.2~0.5% 미만) → 1개월 업무정지(0.5~1% 미만) → 2개월 업무정지(1~2% 미만) → 지정취소(2% 이상)

- 국외 전담여행사 제재 시 일반 사증, 단체전자사증 등 신청 대행도 무사증제도 제재 사항과 동일하게 처분

※ (예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제도상 1개월 업무정지 제재 처분 시, 일반 사증 및 단체전자사증 신청 대행도 1개월 대행정지 처분

<< 전북자치도 현황 >> [소관부서 : 관광산업과]

○ '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637만명*으로, '23년 대비 48.4% 증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 (1,750만 명) 대비 93.5% 수준까지 회복되었음

* 방한관광객 : 중국 (460만 명), 일본 (322만 명), 대만 (147만 명), 미국 (132만 명) 순

- 동시에 방한 체류기간 (6.7일 → 7.0일) 등 방한 관광시장의 질적인 지표 또한 개선되는 추세

○ 아울러, '25년 1월 방한 관광객 수는 비상계엄 등 관광 악재에도 불구하고 111.7만명으로 집계돼, 팬데믹 이전인 '19.1월(110.4만 명)과 비교해 101% 수준까지 회복되었음

○ 이러한 흐름은 방한 관광이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나, 방한 관광객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의 관광자원 활용도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임

* 방한 관광객 지방 방문율 : '19년 37.5% → '24年 33.9% (서울 집중 심화)

○ 이번에 시행되는 무비자 입국 정책은 지역관광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지역관광 홍보, 관광 인프라 개선,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이를 대비한 활발한 유치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대응 타 지자체 현황 >

구 분	추 진 현 황
부 산	- 국경절 겨냥 항공사·여행사와 공동 단체 모객 프로모션 확대 (중국국제항공 및 중국 현지 주요 여행사 4곳과 공동 프로모션 진행) - 뷰티·웰니스 등 테마형 로컬 관광상품 개발로 부산 매력 적극 홍보 (중국 여행사 및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 중국 전용 모바일 결제시스템 '위챗페이' 도시철도에 도입
경 기	- 중국 쓰촨성 청두시등산운동협회, 청두해외유한책임공사 MOU 체결 - 중국단체 무비자 시행 및 국경절 황금연휴 대비 단체관광 유치 확대 기반 마련 (경기관광홍보사무소 (칭다오, 상하이), OTA (온라인 여행플랫폼), 샤오홍슈 등 중국 인기 SNS 활용 홍보이벤트 및 마케팅 추진)
전 남	- 중국 산둥성 직항 노선 취항 추진 및 정기·부정기 항공편, 크루즈 기항 유치 운항보조금, 입항장려금,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모객 인원에 따라 100만 ~ 1,000만원, 체류관광객 1인당 13만원 (3박기준) 지원)
경 남	- 성운국제여행사 (베이징), 콜라투어·라이언트래블 (대만) 등 중화권 주요 여행사 협력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완료) 및 관광상품 판매 (경남 9개 시군 포함 체류형 관광상품 구성 및 숙박비 지원 (1인당 5만원)) -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경남관광협회,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4자 협약 체결 (모바일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
제 주	- '따중디엔핑' (중국 최대 생활정보 플랫폼)과 원도심 활성화 공동 프로모션 캠페인 추진 - 중국 대표 3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랩', '통청여행' 활용 홍보마케팅 및 국경절·광군제 전후 항공권·숙박·데이투어 등 여행상품 프로모션 추진

○ 전북의 경우, 군산과 중국 산둥성을 오가는 석도국제훼리를 활용하여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나, 이는 이미 시행중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외에 추가적인 유치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 또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무비자 입국 대상인 '3인 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이 아닌, 10인 이상 외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무비자 정책 개별 관광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석도훼리 관광상품 연계 운영 예시 >

▸1박 : 60,000지원 **(입항금 30,000 숙박비 20,000, 임차료 10,000)**
▸**2박 : 150,000지원(입항금 90,000 숙박비 40,000, 임차료 20,000)**
▸3박 : 180,000지원 **(입항금 90,000 숙박비 60,000, 임차료 30,000)**
※ 숙박비, 차량임차료 외 문화체험비도 지원 가능하며, 입항금은 최대 2박(90,000원), 3박 이상 시 일반인센티브 지원
※ 모객 기준 10인 이상 외국인

○ 이마저도 전남이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에 맞춰 중국 산둥성과의 직항 노선 취항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노선 신설이 군산-산둥성을 오가는 석도훼리 관광객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현재 도내에서 추진중인 지원사업을 무비자 입국 적용 대상인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에 포커스를 맞춘 한시적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성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이번 정책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지 관계자 및 여행업계와의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의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인구감소 시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AI 기반 범죄예방 전략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연구요약 ≫

◇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AI를 활용한 범죄 예방 사례를 통한 AI 기반 범죄예방 전략

1 들어가며

○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과제 중 하나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 특히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과 고령화의 가속은 지방의 생산 가능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유지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

○ 치안 분야 역시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음

○ AI 기반 범죄 예방 시스템은 CCTV 영상 분석, 이상행동 감지, 예측 기반 순찰 경로 설계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음

2 범죄 예방을 위한 AI 기술 확장 과정

○ 범죄 예방을 위한 AI 기술은 CCTV 영상 분석, 음향 인식, 행동 패턴 분석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이러한 기술은 단순 감시를 넘어 위험 상황을 사전에 탐지하고 실시간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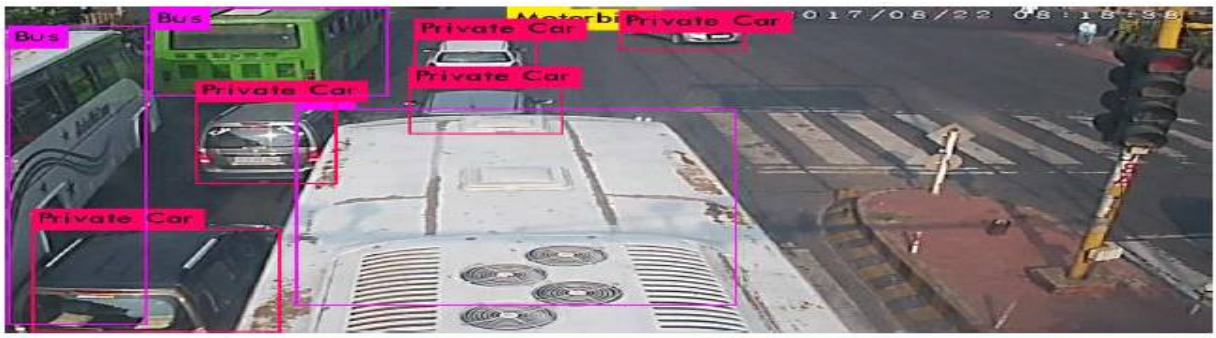
Ⅱ.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1. 객체 인식 기반 감시 기술

○ AI 기반 감시 기술의 도입은 영상 속 사람, 차량, 물체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객체 감지 기술에서 출발하였음

○ 객체 감지 기술의 도입은 CCTV 영상 분석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반복적인 모니터링 업무를 대체함으로써 보안 인력의 감시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였음

< 도로 위 차량 감지 화면 >



[출처] Mayank Singh Chauhan 외 4인(2019), 'Embedded CNN based vehicle classification and counting in non-laned road traffic'

2. 행동 분석 기술

○ AI와 딥러닝 기술이 CCTV 영상 분석에 적용되면서 쓰러짐, 싸움, 배회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기술은 병원, 요양 시설, 학교, 지하철역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낙상 사고 감지, 침입 탐지, 위험 행동 식별 등으로 활용되었으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공공장소 내 싸움 감지 화면 >



[출처] 산업일보(2018.01.16.), '국방 분야 지능형 CCTV 솔루션 성능 인증제 도입', 기사 중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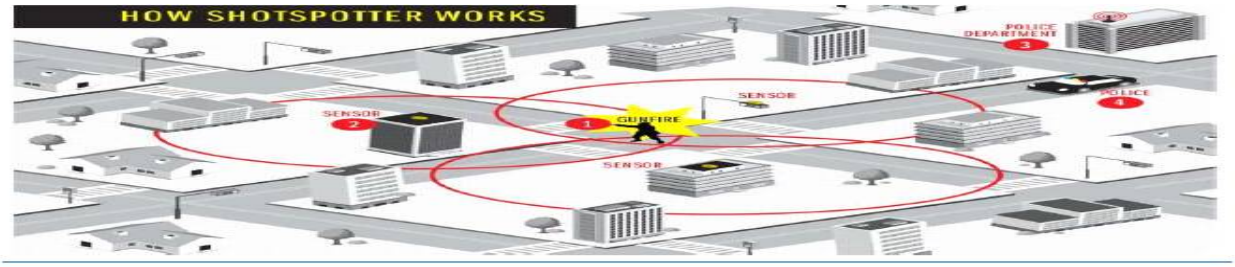
3. 음향 기반 감지 기술

○ AI 기반 감지 기술은 기존의 시각 정보 중심에서 나아가 청각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총성, 비명, 고함 등 위험을 암시하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인식함으로써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임

○ 이러한 기술은 어두운 밤, 골목, 주차장 등 CCTV 사각지대나 비가시 구간에서도 위협을 감지할 수 있어 감시의 공간적 범위를 넓혔음

< 도심 내 총성 탐지를 위한 음향 기반 기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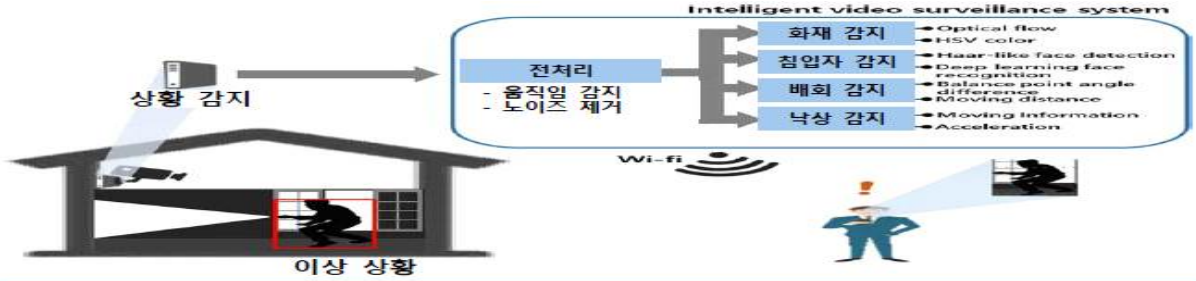
[출처] TIME(2017.09.21.), 'Shots Fired', 기사 중 참고

4. 실시간 연동 체계

○ 범죄 예방을 위한 AI 기술은 단순한 감지 기능을 넘어 분석 결과를 관제센터나 경찰, 보안 인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음

○ 주요 기술로는 IoT 기반 감지 장치, 실시간 알림 플랫폼, 모바일 경보 시스템 등이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분석 결과와 함께 영상, 위치 등 이벤트 정보가 자동 전송되어 빠른 출동과 초동 조치를 지원함

<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및 알림 시스템 아키텍처 >



[출처] Jin Su Kim 외 2명(2021),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real-time intelligent video surveillance system based on embedded module'

5. 예측형 치안 전략

○ 기술의 방향은 점차 실시간 대응을 넘어 미래를 예측하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

○ 이 시기부터는 과거의 범죄 발생 이력, 시간, 장소, 유형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발생을 예측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음

○ 예측형 치안 전략은 경찰 인력의 효율 배치, 사각지대 조기 점검, 범죄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예방 중심의 치안 전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이 됨

< 데이터 기반 범죄 예측 및 대응 체계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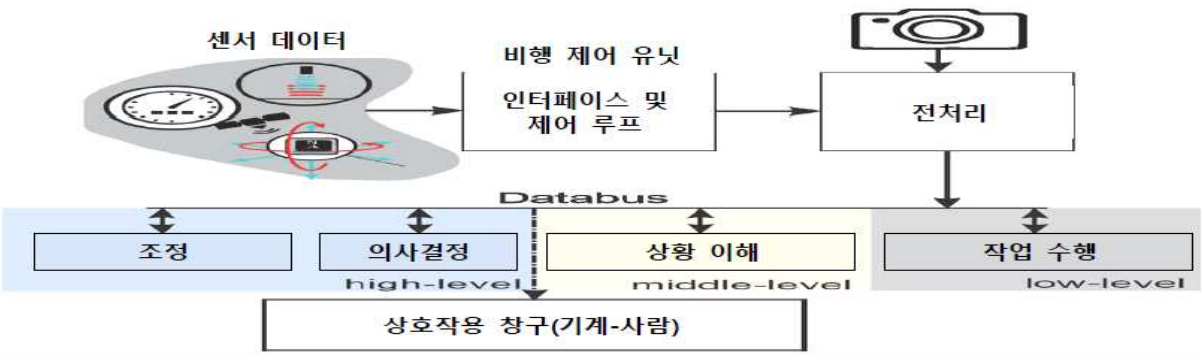


[출처] 프리미엄 조선(윤상연, '범죄환경 위험도지수 개선 연구 I', 2017.12.에서 재인용)

6. 예측형 치안 전략

○ AI의 역할은 단순 감지에서 벗어나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대응 방식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형 감시체계로 진화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자율형 감시체계의 판단 및 실행 구조 >



[출처] Milena F. Pinto 외 4인(2019), 'Surveillance Architecture for Human Activity Recognition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

< 범죄 예방을 위한 AI 기술 확장 과정 >

구 분	주요 기술 및 특징	목표 효과
1	**객체 인식 기반 감시 기술** - 영상 속 사람, 차량 등의 객체 자동 감지 - 정적 이미지 및 단순 움직임 중심 분석 - OpenCV, Haar 등 전통적 컴퓨터 비전 기술 활용	감시 자동화의 시작 : 사람 대신 감지
2	**행동 분석 기술** - 침입, 쓰러짐 등 이상행동 인식 기술 개발 - 자세 추정 및 행동 패턴 분석 알고리즘 도입 - CCTV를 통한 실시간 이상 상황 판단 가능	단순 감지 → 행동 해석 : 움직임의 의도 분석
3	**음향 기반 감시 기술** - 총성, 비명 등의 음향 이벤트 탐지 - CNN, RNN 기반 음향 분석 기법 적용 - 영상의 사각지대를 청각 정보로 보완	시각+청각 감시 융합 : 보이지 않아도 감지
4	**실시간 연동 체계** - 관제센터 및 출동 요원과 즉시 연결 - AI 분석 결과 기반 실시간 경보 전송 - IoT 기반 실시간 현장 대응 체계 연동	빠르고 정확한 대응 : 감지에서 대응까지
5	**예측형 치안 전략** - 범죄 발생 시간·위치 등 사전 예측 - 빅데이터 기반 순찰 경로 및 전략 수립 - 범죄 유형별 사전 대응 체계 강화	사후 대응 → 사전 예방 : 위험을 미리 예측
6	**자율 판단형 AI 감시체계** - 상황 인식, 우선순위 설정 및 대응 방안 제안 - 경고 발령 및 대응 자동 실행 - 사람의 개입 없이 감시 전 과정 자율 수행	완전 자율형 감시 : AI가 직접 판단

3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AI를 활용한 범죄 예방 사례

1. 국내 사례

1-1. AI 기반 통합 방법 인프라 스마트폴 구축 사업 추진(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도시 치안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폴* 설치 사업을 추진

* 이상동기범죄 대응 범죄예방 인프라 설치(CCTV, 스마트폴) : 총사업비 66억('24~'26)
'25년도 예산 17억 5천만원(도 40%, 시군 60%)

○ 전라남도가 주도하고 도내 17개 시·군이 협력하는 형태로 각 지역의 골목길, 공원, 주택가 등에 지능형 CCTV, 조명, 비상벨, 각종 센서 등이 통합된 다기능 스마트 기둥(스마트폴)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

○ 스마트폴에는 AI 영상 분석 기술이 적용되어 이상행동 감지, 군중 밀집도 분석, 화재 및 연기 감지 등이 가능하며 자치경찰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 신속한 현장 대응과 선제적 범죄 예방을 지원

1-2. CCTV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모바일 감시 플랫폼 도입(서울특별시)

○ CCTV 사각지대에 대응하고 주민이 직접 안전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 범죄 예방 앱 '안심이'를 도입

○ 이 앱은 사용자가 위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음량 버튼을 누르는 등 간단한 동작으로 즉시 긴급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치와 함께 실시간 영상이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되어 경찰 또는 관제 요원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CCTV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선제적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주목

< 스마트폰 기반 실시간 안전 서비스 안심이 기능 >



< 전국 안심귀가 어플('25.8. 현재) >

서울안심이	충청남도안심귀가	안심in(인천)	강원안심이
보령시 안심귀가	천안 안심홈	**전주 안심귀가**	영암군 안심귀가
김천 안심귀가 SOS	**군산시 안심귀가**	창원시 귀가길 수호자	사하 안심귀가 서비스
서산시 안심지기	파주 안심e	아산 안심홈	고성군 안심귀가
울산 남구 안심귀가	청주 안심귀가	천안 안심홈	김해 안심애

1-3. AI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화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전북 군산시는 CCTV 기반 영상 관제의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

○ 이 시스템은 사건 발생 시 관제센터 검색창에 절도범의 인상착의나 이동수단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실시간으로 다수의 CCTV 영상을 분석해 범인의 이동 경로를 자동 추적하고 경찰에 신속하게 단서를 제공

○ 배회, 쓰러짐, 폭행 등 이상 행동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징후 발생 시 관제 요원에게 즉시 경고 메시지를 전송

< AI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화면 >



[출처] 연합뉴스(2025.08.01.), '범인 잡는 AI' 군산시 통합관제시스템 효과 '톡톡' 기사 중 참고

2. 국외 사례

2-1. 고령화 지역 중심 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감시체계 구축(일본 나고야시)

○ 일본 나고야시는 고령화와 자율 방범 인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범죄 예방 시스템을 도입

○ 이 시스템은 CRIME NABI라는 AI 기반 범죄 예측 기술을 통해 과거 범죄 유형, 시간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험 지역을 사전에 예측

○ 예측 결과는 Patrol Community 앱과 연계되어 최적의 순찰 경로를 자동으로 제시하며, 사용자가 이동수단과 거리 등을 입력하면 AI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순찰 루트를 제공

< CRIME NABI 기반 맞춤형 순찰 앱 화면 >



[출처] PR TIMES(2021.08.11.), Singular Perturbasions が名古屋市の「AIを活用した防犯対策推進事業」に「Patrol Community」を提供 기사 중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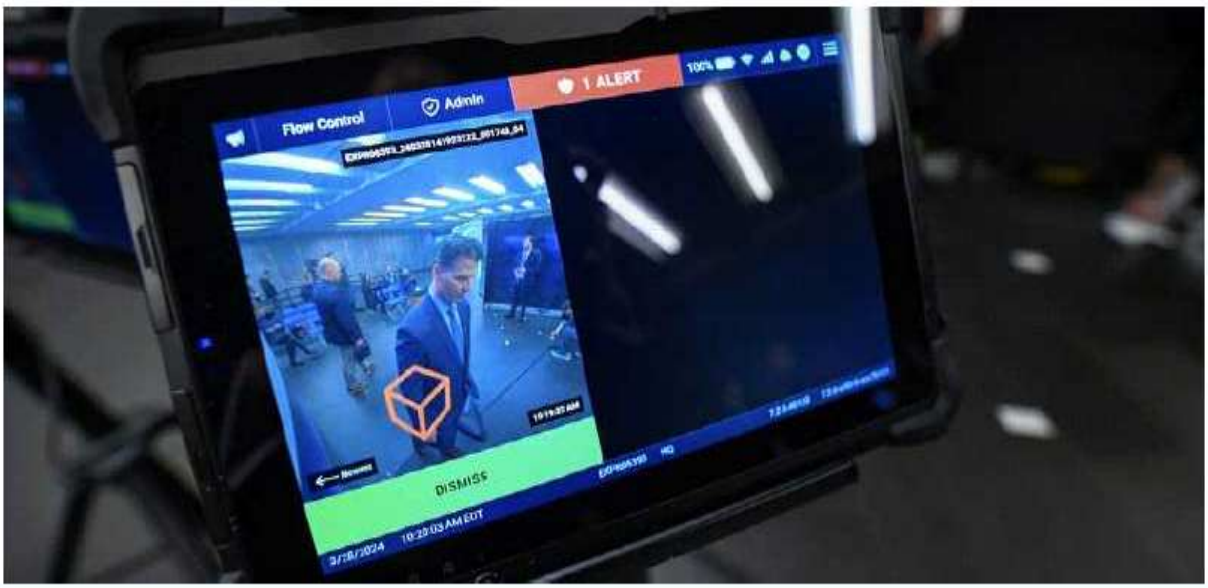
2-2. 지하철 내 선제적 보안 대응을 위한 AI 무기 탐지 기술 도입(미국 뉴욕시)

○ 미국 뉴욕시는 지하철 내 무기 반입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무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

○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는 일부 지하철역에 Evolv Technology 장비를 시범 설치하고 총기나 흉기 등 위험 물품을 비접촉 방식으로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

○ 이 기술은 형태, 질량 등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여 혼잡한 지하철 환경에서도 잠재적 위협 요소를 식별할 수 있어 선제적 보안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Evolv Technology 시스템의 무기 탐지 알림 화면 >



[출처] CITY&STATE NEWYORK(2024.06.23.), 'Evolv gun detection tech rolling out in NYC subway stations this week' 기사중참고

2-3. AI 기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도입(영국 런던 해크니 자치구)

○ 영국 런던 해크니 자치구는 아동을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조기에 보호하고 사회복지 개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도입

○ 이 시스템은 Early Help Profiling System이라는 AI 예측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 출석, 복지 수급, 주거 환경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위험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선별

○ 분석 결과는 사회복지 부서에 전달되며 매월 자동 생성되는 고위험 가정 목록을 통해 복지 담당자가 조기 개입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4 시사점 및 앞으로의 방향

○ 범죄 예방을 위한 AI 기술의 발전은 지역 치안 시스템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

○ 현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는 실시간 연동 체계 및 예측형 치안 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인구감소 지역이나 빈집 밀집 지역과 같은 치안 취약지구에 적용하면 지역적 특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맞춤형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한편 AI가 상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자율 판단형 감시 체계는 아직 상용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제도적·윤리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

1. 지역 맞춤형 치안 전략

○ 지방자치단체별 범죄 유형, 인구 구조, 생활 인프라가 상이하므로 AI 기술 도입 역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지역의 범죄 통계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와 장소를 예측하고 해당 여건에 적합한 감시·경고 시스템을 설계해야 함

○ 예를 들어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은 야간 귀가 경로 모니터링 기능, 도시 지역은 군중 밀집도 분석과 무기 탐지 기술이 효과적일 수 있음

2. 데이터 기반 디지털 인프라 강화

○ AI 기반 범죄 예방의 핵심 전제는 고도화된 데이터 인프라 구축

○ 이를 위해 CCTV, 음향 센서, 위치 기반 장비 등 다양한 IoT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며 영상·음향 데이터의 표준화,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 AI 학습용 데이터셋 공유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함

3.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마련

○ AI 감시 기술 확대는 사생활 침해와 감시권 남용 등 윤리적·법적 문제를 수반

○ 기술 도입 이전에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감시 범위, 데이터 저장 기간, 접근 권한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또한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AI 운영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

4.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

○ AI 기술은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에 상당한 자원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중앙정부는 AI 감시 솔루션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법·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확산해야 함

2. 정부 · 자치단체 AI 활용 [나라살림연구소]

‹‹ 연구요약 ››

◇ 정부 AI 정책의 추진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AI 활용 현황을 통해 전북자치도 AI 도입 방안에 대한 분석

1 AI 활용 현황

○ ’25.7월 기준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생성형 AI인 ChatGPT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는 7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아울러, Gemini, DeepSeek, 클로바노트, Claude 등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등장하며 AI 활용은 빠르게 확산

○ 최근, 한국은행 조사(‘25.8월)*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중 생성형 AI를 ‘한번이라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63.5%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으로 사용한다’에는 41.3%가 응답

* 한국은행 조사(’25.5.19.~6.17. 전국 15~64세 취업자 5,512명을 대상으로 설문)

○ AI활용은 성별로는 남성(55.1%)이 여성(47.7%) 보다 높은 활용률을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청년층(18~29세)가 67.5%로 가장 높았고,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해 장년층(50~64세)은 35.6%에 그친 모습

- 학력 수준별로는 고학력자일수록 높았는데, 대학원 졸업자가 72.9%에 달한 반면, 고졸 이하는 38.4%에 불과했고, 직업별로는 전문직 69.2%, 사무직 63.1%, 노무직은 31.5% 등으로 조사

※ 남성, 청년층, 고학력자, 전문직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

○ 생성형 AI 활용으로 업무시간이 평균 3.8% 감소 (주 40시간 근무 시 1.5시간 수준)했는데, 특히, 경력이 짧은 근로자에게 효과가 크게 나타나 AI가 숙련도 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확인

- 상당수 근로자는 AI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앞으로 AI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AI가 향후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48.6%의 근로자가 응답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17.5%을 큰 폭으로 상회

2 정부는 업무망에 AI 도입과 함께, 독자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추진

○ 행안부는 정부 업무망에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사업을 추진('25.6월~12월)

- 올해 1차 사업으로 9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범부처 공무원들이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 아울러, 과기부는 독자 범용 인공지능 모형(AI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위한 '독자 인공지능 기초모형' 사업에 참여할 '정예팀*'을 선정(8.4일)

*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엔씨에이아이, 엘지경영개발원 등 5개팀

※ AI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포함해 이미지·음성·영상 등 처리 가능

- 이에, 선정된 5개 정예팀이 AI 개발에 필요한 자원(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 연구비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

* 그래픽처리장치(1,576억원), 데이터 공동구매(100억원), 데이터 구축·가공(30억원) 등

○ 한편, 개인정보위원회는 8.6일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 이를 통해 기업·기관에서 AI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

3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AI 개발을 통해 행정업무에 활용

○ 경기도는 '25.7월 총 131억원을 투자해, KT, 와이즈넛 등 5개社와 함께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

- 이 사업으로 행정 특화 AI 모델 기반 서비스를 구현하여, 회의 관리, 정보검색 등 실무 중심의 AI 업무를 지원할 예정

○ 서울시는 문서 탐색, 보고서 작성, 규정 확인 등 반복 행정업무를 생성형 AI로 대체하는 '챗봇 2.0' 사업을 추진('25.8월)

- 市는 자체 LLM을 도입하고 내부 행정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고정 응답 방식의 1세대 챗봇의 한계를 넘어, 맥락 이해가 필요한 복합 질의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

○ 부산시 사하구는 대기업 IT 개발자 출신 직원을 포함, AI 개발에 관심있는 직원 4명으로 '區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AI 어시스턴트 시스템 '사하아이(SahA.I.)'를 직접 개발('25.8월)

※ 사하아이는 기존 공개된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서버 구축비 9백만원으로 개발

- 시스템은 내부 업무망을 통해 별도의 설치 없이 활용이 가능하며, 문서작성, 데이터 분석, 민원인 대화 요약, 정보검색 등의 기능이 제공되어 보안문제 해결과 행정 효율을 확보했다고 평가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 [소관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외]

○ 전북자치도에서는 **'25년 본예산에 '오픈소스 기반 생성형 AI 시스템 자체구축' 사업**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음

○ ChatGPT를 전 직원에게 보급시 연 17.5억원이 소요되고 자료 유출 문제가 발생하나, 서버만 구입 후 **메타社(구 페이스북)의 라마3 모델**을 이용하여 생성형 **AI 시스템 자체구축** 시 초기 구축비용(3억원)으로 무제한 사용 및 보안성 향상, 무상 고도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전북대학교 SW중심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오픈소스 기반 생성형 AI 시스템 자체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23년 경상북도에서는 경북연구원이 개발, 제공한 ‘챗경북’을 통하여 행정업무에 특화된 AI 서비스 3종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시작 첫 달인 3월 3만여 건의 질의를 생성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4월에 만 건으로 뚝 떨어졌고, 이후에도 감소를 거듭하다 9월에는 3월의 3% 수준인 980여건에 그쳤음(’23.10.6. KBS 뉴스)

○ 챗경북의 개발비는 약 1억 6천여만 원, 여기에 서버 운영 비용은 추가로 들어갈 예정임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종량제 서비스가 공공과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

○ 서울시를 필두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LS그룹과 현대건설,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대기업까지 사용량 기반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종량제 AI 서비스의 전사 도입에 나섰음

○ 서울시의 경우 ’서울AI챗’이 도입을 통해 △챗(Chat)GPT △클로드(Claude) △제미나이(Gemini) △퍼플렉시티(Perplexity) △라마(Llama) △미스트랄(Mistral)AI △그록(Grok) 등 29개 모델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별 직원에 월 3만 원 수준의 정액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독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30억 원 정도가 필요하나, 실제 사용량 기반 과금되는 **’용량제’는 연간 약 2억 원 수준**이면 운영할 수 있음

○ 현재 전북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마 3 도입은 정보유출 방지나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AI 이용에 있어 제한적인 부분이 있음

○ 향후 종량제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전북자치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AI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적합한 AI 행정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방안 검토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요약 ››

◇ 감사원의 정책감사 기능을 성과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정조사·감사의 상설화·전문화
◇ 입법부 중심의 견제구조로 전환하여 권력분립의 원리 실현

1 배경 및 문제 인식

1. 현재 감사원 체제의 한계

○ 헌법 제97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으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수행

○ 역사적 변천: 1948년 심계원 → 1962년 감찰위원회와 통합하여 현재의 감사원 출범

○ 민주화 이후 문제점: 1987년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후에도 감사원 제도는 그대로 유지

2 핵심 문제점

○ 국회의 결산심사 한계

- 현행 절차: 정부 부처 결산보고서 → 기획재정부 정부결산서 작성 → 감사원 결산검사 → 국회 심의·승인
- 문제점: 국회는 감사원이 종결한 사안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
- 결과: 권력분립 원칙 작동 불능, 국회의 재정통제권 실질화 필요

○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부족

- 인사 문제: 전윤철·양건 감사원장의 정권 교체 후 중도 사퇴 사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소속이라는 이유로 관련 감사 수행 한계
- 정책감사 논란: 4대강 사업(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윤석열 정부) 등 '표적감사' 논란 지속

2 감사원 개편 논의 동향

1. 기존 연구의 개편 방향

○ **국회 이관론**

- 목적: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 방법: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
- 전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분리

○ **독립기관화론**

- 목적: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 방법: 행정부·입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관화
- 우려: 강력한 감사권한 오남용 통제장치 미흡

2. 통합적 개편 방향(본 보고서 제안)

○ **목표:** 국회의 감사역량 강화 +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동시 달성

○ **방법:** 감사원 국회 이관 + 초당적 운영체계 구축

○ **근거:** 단순 독립기관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례처럼 편향성 논란 완전 해소 한계

3 해외 사례 분석

1. 미국 감사원(GAO)

○ **조직 및 인사**

- 입법부 소속, 총 3,370명, 2022년 예산 7.19억 달러
- 감사원장 임명: 상·하원 다수당·소수당 원내대표 포함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대통령 지명 → 상원 인준
- 임기: 15년 단임, 탄핵 또는 상하원 공동의결로만 해임 가능

○ **주요기능**

- 정책평가에 94%의 자원 배치

- 업무 우선순위: ① 의회 명령 → ② 의회 지도부·위원회 요청 → ③ 개별 의원 요청 → ④ 직권
- 역할: 입법부의 '정책 싱크탱크', 성과측정 및 정책개선방안 제시

2. 영국 국가감사원(NAO)

○ **초당적 운영구조**

- 의회 소속, 공공계정위원회가 감사원 업무 전반 관장
- 핵심 특징: 위원장직을 관행적으로 야당 의원이 담당
- 감사원장: 의회 추천(여야 합의 전제) → 국왕 임명, 10년 단임

○ **주요기능**

- 합법성·적정성 검증 + 경제성·효율성·효과성 성과감사
- 비용 대비 가치 평가를 통한 실질적 정책성과 판단

3. 프랑스 회계법원

○ **초당적 운영구조**

○ **판사와 동일한 신분보장, 징계 명령 권한**

○ **임기 없는 정년제 적용**

4. 독일 연방회계검사원

○ **헌법상 독립기관**

○ **검사원장:** 연방내각 제청 → 연방하원·상원 동의 → 대통령 임명

○ **정년 65세, 최대 12년 임기**

5. 해외 사례의 시사점

○ **정치제도와 감사기관 형태: 단순** 대응관계 없음 (대통령제인 프랑스도 독립기관 운영)

○ **한국 적용방안:** 미국식 의회소속 + 영국식 초당적 운영 결합이 최적

4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

1. 감사원의 기능 확대·조정

○ **정책감사 → 성과평가 전환**

- 현재: 정책실패 책임소재 규명 중심 → 정치적 편향 논란
- 개선: 정책성과 평가 및 개선 컨설팅 기능 중심
- 효과: 국회 국정감사 상설화·생산적 전환 기여

○ **결산심의 절차 개선**

- 현재: 감사원 주도 → 국회 승인
- 개선: 국회 주도 결산심사, 결산-예산심의 연계 강화

○ **직무감찰 기능 분리**

- 권력분립 원칙상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분리 필요
- 행정부 담당 방안: ①부처별 독립 감찰관실 신설 ②국무총리실 등 기존 기구 활용

2.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 **임명절차 개선**

- 감사원장: 원내교섭단체 대표들 동의 → 국회의장 임명
- 감사위원: 원내교섭단체 실질적 합의를 통한 초당적 임명
- 임기: 국회의원보다 긴 단임제, 강력한 신분보장

○ **감사 우선순위 체계**

- 국회 요청(국정조사에 준하는 사안)
- 국회 지도부 및 예결위·유관 상임위원회 요청
- 개별 의원 요청
- 감사원 직권

○ **초당적 운영 관행 확립**

- 감사원 관장 위원회의 교섭단체 간 합의 기반 운영
- 여야 공동 책임 구조 설계

3. 직무감찰 기능 재편

○ **현재 관련 기구들**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

○ **개선방안**

- 부처별 독립 감찰관실 설치(미국식)
- 또는 기존 조직 중 하나로 통합 운영

5 기대효과 및 의의

1. 제도적 효과

○ **권력분립 실현:** 입법부 중심 견제구조 확립

○ **국회 기능 강화:** 결산심사 실질화, 국정감사 상설화

○ **정치적 중립성:** 초당적 운영을 통한 편향성 논란 해소

2. 정치적 의의

○ **민주적 통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강화

○ **투명성 제고:** 정부 정책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향상

○ **책임정치:** 정책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 기반 마련

6 추진과제 및 제언

1. 헌법 개정 필요사항

○ **헌법 제97조 개정:** 감사원 소속 변경

○ **개헌 논의와 연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2. 관련 법률 정비

○ **민주적 통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강화

○ **투명성 제고:** 정부 정책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향상

○ **책임정치:** 정책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 기반 마련

3. 정치적과제

○ **초당적 합의 도출**

○ **국회 차원의 선제적 논의 시작**

○ **정책 우선과제로 추진**

4.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25. 7.]

≪ 연구요약 ≫

◇ 본 논문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는 국내외 기금 운용 사례와 전북도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금의 목적성 및 차별성 확립, 안정적인 재원 확보, 정량적 평가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재원 다변화, 기금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발굴**을 핵심 정책 제언으로 내놓고 있음.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기후대응기금**은 **기후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전북자치도는 **2024년부터 운용을 시작**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전북자치도 기후대응기금의 역할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기금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특화사업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주요 내용

1) 기후대응기금 현황

○ **기금개요 및 전북자치도 현황**

-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며, 다양한 수입원을 활용하여 융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함

- 전북자치도는 2023년 환경보전기금(환경보전과 개선중심의 사업 목적)을 폐지하고 2024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음.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등 매우 광범위한 목적과 다양한 용도를 명시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2025년 기준 1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 조성액

기준 기금규모는 총 1조 621억원 규모로, 지역개발기금이 57.4%, 지역균형발전기금 20.4%, 통합계정 7.8%, 재난관리기금 3.6%, 재해구호기금 3.0%, 사회적경제기금 2.6%의 비중을 보임

- 2025년 조성액 기준 100억 이상 기금은 8개이며, 100억 미만 기금은 10개로 집계됨. **기후대응기금**은 **가장 최근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 조성액**은 **약 36억원 규모**임 [표2-3]

  * 2025년 계획 기준 전북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조성액은 약 53억 원이며, 집행계획은 약 17억 원으로 집계됨

○ **2024년 기금사업 목록**

- 2024년 첫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총 9건으로 기존 환경보전기금 사업에서 지속사업 5건,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4건으로 구성됨

- 재활용 및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한 폐기물 부문 사업 4건, 생활실천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정책기반 3건, 산업공정 전환을 위한 산업부문 사업 1건, 산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흡수원 관련 사업 1건으로 구성됨

○ **2025년 기금사업 목록**

- 2025년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총 11건으로 기존 지속 사업 6건, 탄소중립 전환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5건으로 구성됨. 재활용 및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한 폐기물 부문 사업 7건, 환경교육, 생활실천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정책 기반 사업 4건으로 구성됨 [표2-6]

○ **타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설치현황**

- 2025년 2월 기준 전북포함 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11곳에서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조례 제정과 실제 기후대응기금 운용 여부는 불일치)

  * 서울특별시('23.12.29.일부개정), 부산광역시('24.12.11.제정), 경기도('23.10.11.제정), 전라남도('22.03.31.제정) 외 기초지자체 11곳

(단위 : 천원)

[표 2-3] 전북자치도 기금조성 현황

기금명		'24년도말 조성액ⓐ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계		1,091,536,256	233,487,713	262,961,630	1,062,062,339	△29,473,347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66,239,672	27,855,017	11,709,657	82,385,032	16,145,360
	재정안정화계정	318,928	9,920	-	328,848	9,920
지역개발기금		667,480,442	137,487,821	194,879,450	610,088,813	△57,391,629
재난관리기금		31,007,369	18,050,222	11,274,850	37,782,741	6,775,372
남북교류협력기금		11,207,987	569,992	93,800	11,684,179	476,192
체육진흥기금		10,168,226	384,875	280,000	10,273,101	104,875
자활기금		3,847,976	278,740	594,710	3,532,006	△315,970
재해구호기금		23,358,768	9,491,030	1,050,000	31,799,798	8,441,030
성평등기금		3,412,956	148,860	70,000	3,491,816	78,860
노인복지기금		2,112,185	73,240	68,000	2,117,425	5,240
식품진흥기금		8,696,301	689,869	1,051,190	8,334,980	△361,321
기후대응기금		2,785,000	2,073,670	1,248,837	3,609,833	824,833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7,439,182	1,274,195	-	8,713,377	1,274,195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216,968,399	18,000,000	18,270,000	216,698,399	△270,000
	투자계정	4,408,156	13,055,240	15,121,000	2,342,396	△2,065,760
사회적경제기금		101,308	503,560	95,000	509,868	408,560
농림수산발전기금		31,295,834	3,128,832	7,000,000	27,424,666	△3,871,168
고향사랑기금		687,567	412,630	155,136	945,061	257,494

자료 :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 천원)

[표 2-6] 2025년 기금사업 목록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천원)	구분	유형
전북특별자치도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원(신규)	·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초환경교육센터 및 민간환경교육단체 협력 등	기금 270,000	정책 기반	신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신규)	· 지역 내 환경보전 현장교육 및 환경행사 지원 등	기금 70,000 총사업비 350,000 [도비 20%, 시군비 80%]	정책 기반	신규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신규)	· 영농폐자재(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등) 수거 및 처리 지원	기금 204,000 총사업비 680,000 [도비 30%, 시군비 70%]	폐기물	신규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신규)	·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상설 거점 배출시설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재활용 촉진 유도	기금 243,000 총사업비 1,215,000 [도비 20%, 시군비 80%]	폐기물	신규
투명페트병 재활용 촉진 지원(신규)	·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기금162,000 총사업비 540,000 [도비 30%, 시군비 70%]	폐기물	신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계속)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정보공유, 홍보 컨텐츠 개발 등 지원 - 탄소중립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 기후변화주간 등 활용 도민 참여 이벤트 전개, 기후미식 트렌드를 반영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등	기금 100,000	정책 기반	계속
탄소중립 마을 환경 조성(계속)	·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급 - 빈병류(100원/개), 봉지류(105원/개) - 수거(농업인) → 계량(공단) → 수거보상금 지급(시군→농업인)	기금 30,300 총사업비 101,000 [도비 30%, 시군비 70%]	폐기물	계속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활성화 인센티브(계속)	·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우수 시·군 선정, 인센티브 지급 - 청소행정 효율성, 생활쓰레기 감량 등 4개 분야 14개 지표	기금 24,000	폐기물	계속
재활용품 안정적 수집 체계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실현(계속)	· 재활용품 수집하는 취약계층에 안전용품 지급 - 안전물품 : 야광반사판, 야광조끼, 미세먼지마스크, 장갑 등	기금 5,537 총사업비 18,460 [도비 30%, 시군비 70%]	폐기물	계속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활동 지원(계속)	· 하천 수중·수변 환경정화 활동, 환경교육 등 지역 내 탄소중립활동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지원	기금 80,000	정책 기반	계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계속)	· 주민들이 종이팩, 폐전지, 아이스팩, 상패 등을 수집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기관에 가져오면 친환경 화장지(건전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환	기금 60,000 총사업비 200,000 [도비 30%, 시군비 70%]	폐기물	계속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 내부자료

2) 기후대응기금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정부 기후대응 관련 기금운용 사례분석

가. 국내사례

- **국가 기후대응기금**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2022년에 신설된 기금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됨

- 기금의 주된 수입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배출권 경매 수입, 복권기금** 등 이지만, **재정 운용에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음. 배출권 거래시장 불안정, 세수 감소 등으로 주요 수입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 2025년 기준 총 2조 6,224억 원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기반 구축,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 141개 사업에 투입될 계획임. 다만, 다른 회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환경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기획재정부가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가 사업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향후에는 4대 핵심 사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금의 효과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타 기금의 경우 **명확한 기금 목적성에 맞춤형 운영**을 통해 일반회계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 진흥'의 명확한 목표로 일관성 유지 용이)

  - 또한,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전략이 필수적**이며, 부서 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치형 운영 기구를 모색**해야 함

나. 국외사례

1) EU (혁신기금)

- **EU 혁신기금**은 **저탄소 기술 투자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 기술 성숙도 6~9단계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EU의 저탄소 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EU는 목적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및 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한 현대화 기금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기후기금으로 구분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기금의 주요 재원은 **배출권 수입**과 NER300 미사용액으로, 연간 약 5.6조 원의 규모임. 2024년 9월 기준으로 총 124개 프로젝트에 약 67.2억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수소 부문**이 18개로 가장 많은 프로젝트 수를 기록함. 이외 시멘트 및 라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화학 부문 등에 지원함

- 가장 많은 지원금이 이뤄진 분야는 시멘트 및 라임 부문으로 약 19.4억 유로에 달하며, 화학(8억 9,331만 유로)과 수소(7억 5,401만 유로)가 그 뒤를 이음. 특히,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 관련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약 72%를 차지하며 기금 활용의 중심을 이룸

2) 일본 (녹색혁신기금)

- **일본 녹색혁신기금**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의 핵심 정책 수단임. **총 3조 엔 규모**로 **2021년부터 10년간 운용**되는 이 기금은 **10년 만기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며,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관리 전반을 담당함

- 이 기금은 CO2 감축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개발**에 집중 투자됨. 특히 **에너지 구조 전환, 산업 구조 전환, 그린 전력 보급 부문**에서 실효성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별해 지원함

- NEDO는 사업 선정부터 평가, 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사업별로 명확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함. 또한,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성과 책임과 실패 가능성을 공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3) 독일 (기후전환기금)

- 독일의 기금은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이 기금은 **배출권 수입**과 **연방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2024년 기준 그 규모는 576억 유로(약 80.6조 원)에 달함. ETS 수익을 기반으로 하되, 일반회계 보완 및 채권 발행 등 유연한 재원 확보 전략을 활용함

- 기금은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탈탄소화(수소 기반 철강·시멘트 등), e-모빌리티 개발,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계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음

- 기금 관리는 **CO_2 감축량, 사업 전환율 등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하며, **연간 보고서 의무화와 마일스톤 방식 예산 지급**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

4) 해외 기후대응기금 운용사례 시사점

- 해외 주요 국가의 기후대응기금 운용 사례를 보면, 기금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특징이 있음. 필요에 따라 복수 기금을 운용하기도 함

- 기금 운용 구조는 **단일 부서 또는 독립 운영 기구**를 통해 일원화하며, **전문가 그룹의 기술 심의**로 전문성을 강화함. 재원 확보는 **배출권 거래제, 채권 발행**, 일반회계 전입 등 **다각화**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함. 또한, **성과 기반 지원, 정량 지표 설정, 연차 보고서 의무화** 등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

○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사례분석

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후대응기금**은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임. 누적 조성액은 7,011억 원 규모이며, 주요 재원은 기타 수입(36.8%)과 융자금 회수(26.2%)로 구성됨. 총 집행액은 6,784억 원으로, 이 중 융자성 사업비(64.6%)와 비융자성 사업비(21.2%)에 대부분이 사용되었음

- 서울시 기후대응기금은 **2007년**에 설립되어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와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함

-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용 계획, 결산 보고 등을 심의하지만,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

나. 경기도

-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은 2023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조성액은 누적 343억 원 규모로, **대부분 전입금**으로 충당되었고, 집행액은 339억 원 수준임

- 2025년 기준,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산은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30.1%), 에너지 융자지원사업(23.9%)** 등 특정 분야에 높은 비중으로 편성됨. 총 12건의 사업 중 7건이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기금 운용 초기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음. 이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결산, 그리고 성과분석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함. 다만, 별도의 구체적인 기금운용 성과평가 체계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음

다. 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2022년,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함. 이 기금은 교육·홍보, 온실가스 감축,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현재까지 **72.5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5년에는 **5.6억 원**을 탄소중립 교육 지원사업에 집행할 계획임. 현재 기금 잔액은 **66.9억 원**을 달성함

-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은 교육·인재양성·문화마을 조성 등 생활 실천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비 규모가 2023년 2.3억 원에서 2025년 1억 원으로 감소함

- 관련 조례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금 조성 및 관리, 운용 계획 수립, 사업 선정 등의 기능을 담당함. 다만, 기금 운용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 체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사례분석 시사점**

-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서울과 경기도는 **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다양한 수입원을 활용하고 있음. 서울은 주식 배당금, 배출권 매수 비용 환수 등을, 경기도는 출자배당금, REC 지분 판매 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정부와 지자체는 모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 운용을 관리하지만, 서울과 경기의 경우 구체적인 성과평가 절차가 미흡함. 전남과 전북은 아예 성과 평가 명시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심의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및 전환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하며, 융자성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경기도는 최근 기금 운용을 시작했으나, **기후테크와 RE100** 등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융자와 보조금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임

- 반면, 전라남도는 전북과 유사한 여건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중심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중복을 방지**하고 **성과 중심의 선도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협력 및 융자성 사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여건분석 및 기본방향

○ **전북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여건 종합분석**

- 전북자치도 기후대응기금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자면,

· **강점**: 전북은 기금 조성 및 운용 시기가 빨라 선도 모델 구축에 유리하며, 기존 환경보전기금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약점**: 재원 규모 부족으로 대규모 사업에 한계가 있고,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정량적 성과평가 체계가 부재함

· **기회**: 정부의 정책 지원 확대와 민간 ESG 요구 증가로 협력 가능성이 커졌고, 기후금융을 통한 재원 다각화 기회가 있음

· **위협**: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원 축소 가능성, 지역별 기후 피해 편차로 인한 효율성 저하, 그리고 성과 부족 시 기금의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음



[그림 4-1] 전북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여건 종합분석(SWOT)

- 전북자치도 기후대응기금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비전** : '함께하는 탄소중립 전환, 지자체 2050 탄소중립 선도'로, 현재 기금 규모는 작지만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지향점을 담고 있음.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중립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 사업을 지원하여 핵심 동력으로 삼는 것임

- 기본 방향으로, **안정적인 기금재원 확보(D-1), 효율적 집행체계 개선(D-2), 체계적 기금사업 추진(D-3)**을 둘 수 있음

·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국비 확보, 시·군 출연금 제도화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녹색금융 도입, 기후테크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모색함

·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기금의 목적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성과 중심의 투명한 집행 체계를 마련함. 이를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기획-집행-평가에 이르는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함

· **체계적 기금 사업 추진**: 기후대응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화된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함. 이를 위해 모듈형 사업 체계를 구상하고, 14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형 연계 사업을 제안함



[그림 4-2] 전북자치도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위한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전북자치도 현황 및 시사점›› [소관부서 : 탄소중립정책과 외]

○ 전북자치도는 2024년부터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시작하며, 타 지자체보다 빠르게 기금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강점**이 있음. 하지만 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대규모 및 중장기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간의 중복성 우려**가 있으며, **정량적인 성과 평가 체계가 부재**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음. 이러한 재정 및 관리상의 한계는 기금의 목적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도 자체 재원만으로는 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고,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지역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 정부와의 협력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더불어, 기금의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 경비의 반복적인 지출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전북광역환경교육센터의 사무실 유지비와 같은 비용이 기금의 핵심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출되고 있음이 2025년 제1회 추경 분석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음. 이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목적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1)]

○ 기금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임. 일반회계 전입금 외에 국비 지원, 녹색 금융 도입, 기후테크 기업 투자 등을 통해 재원을 다변화해야 함. 또한, 기금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현재 부재한 정량적 성과 지표(온실가스 감축량 등)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체계 마련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협의체 운영**을 통해 14개 시·군, 공공기관, 전문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전북의 특성을 살린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융자성 사업을 병행**하여 기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1) 2025-4호 정책현안포커스 ('25년 전북자치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경 예산안 분석 97쪽~99쪽 참고)

5.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 [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요약 ≫

◇ 국가전략산업의 하나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용인에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 2024년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약 35 GVA(기가 볼트암페어)의 60%인 21 GVA를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클러스터 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리적 가능 여부 검토

1 반도체와 전기의 품질

○ 국가전략산업의 하나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일반산단')를 조성하여 2053년까지 클러스터 투자를 유치*

* 총 투자액:622조(삼성전자:360조, SK하이닉스:122조)

○ 반도체 산업에는 전기 · 용수 · 폐수 처리 시설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고, 팹 운영에는 전기뿐만 아니라 항온 · 항습을 위한 열도 공급되어야 함

○ 현재 SK하이닉스가 입주할 일반산단에서는 LNG 열병합발전시설이 건설되고 있으며, 향후 유효전력 16GW를 처리할 변전 시설과 클러스터 내 · 외에서 최대 16GW의 전력공급이 가능해야 함

○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력공급의 관계에서 유의해야할 내용

○ 첫째, 전기의 품질 문제로 반도체 산업은 양질의 전기로 설비를 가동할 때 수율(yield rate)이 높으며, 양질의 전기란 전압과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전기를 말하는 것으로 중단없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요구됨

○ 둘째,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내 대규모 산업단지의 입지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반도체 산업은 전기, 용수, 열, 가스, 압축 공기 등 유틸리티(utility)와 폐수 처리 시설 등 인프라가 필요함. 그러나 유틸리티는 대부분 지방에 있는데 일자리와 세수는 산업단지가 입지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이 송전선 등 갈등 요인을 발생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음

○ 셋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되어야 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기반 시장 제도가 미비된 가운데 클러스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감시 기술, 수요예측 기술, 인증서 제도도 함께 개발되어야 함. 전력 산업계의 기술 수준과 전력 시장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2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에너지 리스크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 공급계획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 공급 계획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국가 산단	'30년 초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LNG 발전소 건설 약 3GW의 전력을 공급	호남 지역에서 용인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1개 건설	'44년 이후 추가 공급량 보강, 전력 계통망 및 전력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대안 마련
일반 산단	'27년 팹 가동을 위해 송전선로 구축(신안성-동용인)하여 약 3GW 규모의 전력 공급 · SK하이닉스와 중부발전: 자가1.5GW	송전선로(동해안-용인) 건설하고 산단 내 변전소 신설	-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전력투구 한다』, 2024.11. 27.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을 가동하기 위한 16GW 중 약 4.5GW가 클러스터 내에서 건설될 예정이고, 기타 필요 전력인 11.5GW 중 일부는 재생에너지로 클러스터 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전력은 외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전해야 함

○ 일반산단에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LNG 열병합발전소는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4기의 팹에 이를 공급. 2026년까지의 공급 규모는 1.5GW이며, 이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상용자가발전 방식.

○ 반도체 사업자의 입장에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닌 사업 리스크(risk)는 아래의 표에서 정리하였음

<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에너지 리스크 >

종류	내용
물리적 위험	송전망 건설 가능 여부, HVDC 건설 지연
경제적 위험	LNG 가격 변동 및 발전단가 · 전력요금 상승
정책적 위험	RE100 규제 변동
기술적 위험	주파수 · 전압 불안정, 정전, 전력망의 복잡성
사회적 위험	지방자치단체, 주민 협의의 어려움, 법적 갈등

○ 클러스터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상당량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송변전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동해 전력을 수송하는 HVDC(초고압직류망)는 고장 시 복구 시간이 길고, 전력망 내 비싼 분산전원(ESS 포함)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리스크가 있음

3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공급의 문제점

1. 전력망 안전도 취약성

○ 팹은 1분 내외의 정전만으로도 사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 발생

○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전력망 공급계획은 지양되어야 함. 특히 팹 내에 전압 · 주파수 안정과 순간 정전 방지를 위한 필수 설비를 갖추도록 규제가 필요함

○ 2024년 서울 · 남서울 변전소의 피상전력은 약 35 GVA(기가 볼트암페어)이고 이의 60%인 21 GVA를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

○ 용인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은 서울의 32배에 달함. 좁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집중 설치, 송배전망의 이중화 · 지하화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함

2. RE100 산업단지 계획과의 연계 부족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반도체는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100%까지 높인다는 RE100을 이미 선언하였음

○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생산은 향후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하지만 산업단지 내에 태양광을 설치할 여유 부지가 없음. 결국 용인에 입주할 반도체 회사의 RE100 이행 방법은 인증서 구매 방식만 남게 됨

3. 재정부담과 사회적 갈등 유발

○ ❶한국전력공사 재정 부담, ❷선로 경과지 주변 주민들 반발에 따른 공사 지연 등도 예상됨

○ 한국전력공사는 2025년 2분기 반기보고서 연결기준으로 206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한전의 차입금은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약 86.5조 원이고 2028년까지 상환해야 할 원화사채가 약 49조원에 이름

○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24~'38년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전력망에 73조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함. 또한 서해해상풍력발전에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고가의 해상풍력을 통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임.

○ 송전선 건설에 대한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했지만, 여전히 수용성 확보는 충분치 않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9월 중 시행 예정인데, 송전사업자는 여전히 송전선 건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4. 탄소중립 정책과의 충돌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 16GW는 대한민국 전체 최대부하(2024년)의 약 16.5%에 해당하는 수준임. 이것을 모두 화석연료 에너지로 공급하게 되면 탄소중립 정책과 역행하게 된다.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부족하고 수송 경로도 이미 혼잡 상태임.

○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직접거래(PPA)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임. 현재 여러 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등은 보이지 않고 LNG 발전 공급계획만 보이는 데 이는 탄소중립 목표와 역행함.

4 개선 과제

1. 전담 DSO 구성

○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품질 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전력품질 유지를 위한 배전망관리기관(DSO, Distribution System Operator)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 특별 DSO 지정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함

○ DSO는 배전단 이하 지역의 전압을 제어하고 전력 품질을 감시. 전담 DSO는 가스터빈 발전기, ESS, 연료전지 등을 통합하여 가상발전소

(VPP)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자가발전 후 소비하고 남는 여유 용량으로 주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클러스터 내 재생에너지와 ESS로 전력 품질을 보정하도록 함.

2.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

○ RE100 구현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전력 시장에서 인증서 구매 방식이 있음

○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직접 구매하기가 어렵고,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인증서로 구매하는 방식이 불가피함

○ 이런 상황 중에 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와 인증서는 폐지 예정으로, 국내·외에서 상호 인정되는 인증서 개발 등 새로운 시장 제도도 구상해야 함

3. 갈등 비용의 가격화

○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모색도 필요. 지방자치단체는 송전철탑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송전선에는 적용되지 않음

○ 「지방세법」제141조 등을 개정하여 송전선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야 함. 다만, 과세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송전선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과세 대상, 송전선), 지역별차등요금 등 전력 관련 정책 비용을 징수하여 송변전설비 경과지에 이를 재투입해야 함.

○ 송전선 건설의 당사자들이 구체화 될수록 당사자들의 개입과 관심도가 증가하지만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 이는 특별한 변화 없이 사업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기에 협의를 마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하여 송변전설비에 대한 대체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여 간소한 절차로 독립된 기관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일시적 보상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연간 나누어 주는 송전선 연금 제도(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4. 전력망 신뢰도 향상

○ 전력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접속선로 및 변전소를 이중화하여 N-2 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함

○ 공용망 방식에서도 N-2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계와 운영 측면에서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 인입선 등 자가설치 설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도 고려할 수 있음.

5 전력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성

○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 정책의 기조는 품질 높고 저렴한 전력 공급과 RE100 이행 환경 조성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이 모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밀도 높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 구성이 물리 ·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함

○ 그 가능 여부는 계획서가 아닌 계획 입안자들이 방문한 현장에서 확인될 것임

○ 사업 개발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공장 자체를 가동할 수 없으므로 전력 공급 및 연료 조달의 책임 문제도 계약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수립해야 함

6. 디지털교육, 새로운 기회의 확대인가, 격차의 또 다른 이름인가?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요약 》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누구나 형평성 있게 비판적·자기주도적 디지털 학습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대응이 필요

1. 교육격차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이란?

○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교육이 전제해 온 '배움'의 정의 자체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학습자 간 역량 격차가 나타나고 있고, 그 중심에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그렇다면 디지털 리터러시를 둘러싼 개인 및 집단 간 격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디지털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차이는 기존 교육격차와 어떤 방식으로 맞물려 있는가? 이 쟁점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집된 다양한 경험적 자료(2022~2024)를 바탕으로, 교육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격차의 새로운 양상을 포착하고 향후 교육적 대응 과제를 모색하였다.

2. 기술 발전이 만든 새로운 불평등: 디지털 접근과 활용의 격차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나라 학교의 디지털 전환은 인프라와 장비 보급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디지털 접근'은 단순한 기기 보급이나 네트워크 접속에 그치지 않는다. **디지털 자원의 교육적 의미**는 **활용 방식**과 **질적 경험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 같은 기기와 인터넷 환경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습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수준은 일반 대중과 거의 유사한 수준

(96.5%)에 도달했지만, 디지털 활용 역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65.1%)에 머물고 있다. 고령층은 디지털 활용 수준이 55.3%로, 디지털 활용 격차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 **OECD의 PISA 2022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 효능감**은 **OECD 평균(0.000)을 상회**하는 0.170이며, **'학교 밖 디지털 자원 접근 기회'**는 0.260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환경에 대한 접근성은 국제적으로 상위권**임이 확인된다(<표2>).

○ 그러나 **수업 내 실질적 활용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탐구 기반 학습, 교수·학습 지원, 수업 중 활용도 등에서 **한국은 OECD 평균 이하**이며, 특히 **'수업 중 디지털 자원 활용도'** 점수는 -0.279로 조사 대상 **43개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 요컨대,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접근 수준**에서는 **'세계 최고'**, **활용 수준**에서는 **'세계 최하'**라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질적 활용의 우위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매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격차의 폭과 양상은 가정 배경 등 귀속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표 2〉 국내 중등학교 학생들의 디지털 자원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 항목		한국 순위	사례 수 (모집단)	평균	표준오차 (평균)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자기효능감		5	396,486	0.170	0.022
		OECD평균	8,636,007	0	0.003
디지털 자원의 접근성	학교 밖 디지털 자원 접근 기회	1	404,571	0.206	0.011
		OECD평균	9,091,991	0	0.003
	학교 내 디지털 자원 접근 기회	14	407,329	0.060	0.050
		OECD평균	9,310,335	0	0.003
디지털 자원의 교수학습 활용도	탐구기반 학습 활동에서 디지털 자원 활용도	27	403,934	-0.380	0.067
		OECD평균	9,014,448	0	0.004
	교수 학습 자원이나 학습 관련 피드백 시 디지털 자원 활용도	28	403,621	-0.453	0.039
		OECD평균	9,039,048	0	0.003
	수업시간 디지털 자원 활용도	43	401,658	-0.279	0.032
		OECD평균	8,745,176	0	0.004

주: 제시된 값은 표준화 지수(OECD 국가 평균=0, 표준편차=1)로 평균 값이 0보다 크면 OECD 평균보다 높고, 0보다 작으면 OECD 평균보다 낮음을 의미함.
자료: OECD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2022))」

3. 디지털 리터러시와 학습역량의 연결성

○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은 대부분 학생에게 보급되었지만, 이를 학습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디지털 자원의 활용은 단순한 사용 여부가 아니라,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학습 과정과 경험의 질을 가른다. 이하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떻게 학습 역량 및 사회적 배경과 맞물리며 교육격차를 만들어 내는지를 살펴본다.

○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한 기기 활용 능력을 넘어 **정보 탐색, 분석, 해석, 표현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 역량**이다.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 (KEMS 2023)」 자료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수 - 일반 - 잠재 취약 - 취약'의 네 집단으로 구분되며, '자료 탐색', '자료 활용', '디지털 상호작용' 등의 세부 영역에서도 점수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 디지털 학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활용 역량에서 학생 간 격차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보다 진척될 경우 학습경험의 질과 결과에 있어 학생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은 **학업 성취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PISA 2022 분석에 따르면, 학업 상위 집단은 수업 시간에 디지털 자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읽기 영역에서 상위 집단(－0.118)과 하위 집단(－0.545) 간 점수 차이는 0.43점에 달했다. 수학, 과학 영역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 이러한 분석 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단순한 기술 능력이 아니라 학습 전략 및 성취와 연결된 인지적 역량임을 시사한다. 디지털 자원 활용의 격차는 기존의 학습 격차와 중첩되며, 양자 간에 '부익부 빈익빈' 순환 구조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특정 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은 개인 차원의 능력과 노력으로 증진될 수 있지만, 이와 독립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KEMS 2023 분석에 따르면, **가구 소득과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디지털 리터러시 전 영역의 점수가 높았다**. 예컨대 '디지털 자료의 탐색과 저장' 영역에서 고소득층은 3.75점, 저소득층은 3.63점이었으며, 부모 학력 수준이 대졸 이상일 경우(3.70점), 고졸 이하일 경우(3.6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 PISA 2022 분석에서도, 가정배경의 영향력이 큰 '학교밖 디지털 자원' 접근 수준에서 상·하층 간 평균 차이가 존재한다(상층 3.3점, 하층 2.8점). 또한, 학교에서 탐구 기반 학습 활동 활용도(상층 2.5점, 하층 1.9점) 등에서도 계층적 격차가 일관되게 확인되었다([그림2],[그림3]).

[그림 2] 국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디지털 자원의 접근 수준



[그림 3] 국내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디지털 자원의 학습적 활용 수준



자료: OECD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2022))」

4. 종합적 논의 및 제언: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격차의 조망과 전망

○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기술 환경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 기회의 구조와 학습 역량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교육격차의 발생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은 **더욱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 교육격차와 맞물려 가정의 경제·사회·문화 자본 등 전통적인 격차 구조를 반영하거나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디지털 자원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사회 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는 **기존의 교육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

○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평등은 교육적 대응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격차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개입 가능한 범위에서 실천적·학술적 논의가 심화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교육은 기술 활용을 넘어 교육의 목적과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을 요구한다. 특히 교육격차 관점에서 주목할 점은 디지털 문명화가 새로운 문해 환경으로서의 '다중복합 리터러시 사회' 형성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 20세기 이후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문자성과 구술성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중첩되며, 새로운 문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디지털성(Digitality)은 비선형성, 직관성, 상호작용성, 멀티모달 소통을 중심으로 구현되며, 문자성(Literacy)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학습 생태계를 구성한다. 팟캐스트, SNS, 유튜브 등은 문자 중심의 선형적 소통 구조를 탈중심화하고, 실시간·감각적·다매체적 소통 방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 이러한 디지털 문해 환경은 지식의 생산, 전승, 공유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제 누구나 멀티모달 콘텐츠를 생성·편집·공유하는 주체적 발화자이자 참여적 학습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보 활용 능력을 넘어 표현력과 해석력, 자기주도적 의미 구성 능력을 포함하는 복수형의 '다중복합 문해력'(digital literacies)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Bawden, 2008).

II. 주요 연구기관 발표자료

○ 최근의 생성형·체화형 인공지능 기술은 정보의 탐색·저장·처리 등에서 인간 신체(두뇌·중추신경계)의 기능적 '확장'을 넘어, 지식·정보의 판단·추론·생성에 있어 인간 신체로부터 '분리·독립(amputation)'의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Willatt & Flores, 2022). 이러한 추세에서, AI 기술 활용에 따른 정보 탐색 및 활용 과정에서의 '증강 격차(augmented gap)' 개념이 새롭게 대두하였다(김문조, 2020). AI 활용으로 정보 탐색·처리에 소요되는 사람의 물리적 시간과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의 비판적 판단과 추론, 창의적·주체적 문제 해결 능력 등에서 학습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 이러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교육 제도와 학교**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공간을 넘어, **새로운 문해 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표현력, 해석력, 자율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는 역할과 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적 대응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한다.

○ **첫째, 다중복합 리터러시 개념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형식 전반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읽기 - 쓰기 - 말하기' 중심의 전통적 문해 교육에서 벗어나, 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 다양한 기호 체계를 활용한 복합적 표현과 해석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질문 설계 능력, 검색·생성 결합형(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AI 활용 역량, 정보의 비판적 판단과 의미 추론 능력, 그리고 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윤리적 규범 준수 등 고차원 학습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해야 한다.

○ **둘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학교효과 실천 모델**을 새롭게 마련하고, **학교교육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전통적 문화자본(예: 부모 배경의 세습)과 달리, 공공 인프라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축적·공유·분배될 수 있는 공공적 지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학교는 디지털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교사 - 학생, 학생 - 학생, 학생 - 가정 - 지역사회 간 상호작용을 통해 순환·전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디지털 자원 접근성과 활용 역량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의 발달은 세대, 연령, 지역, 계층,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향후 **다중복합 리터러시 개념에 기반한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다층적 진단 및 지원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진단 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중복합 리터러시 개념의 하위 구성요소, ▲학령기별 종단형 디지털 역량 발달 및 성취 기준, ▲사회문화적 격차를 반영한 진단 항목, ▲생성형 AI 기반 질문 구사력과 증강력 및 창의적 생성력 측정 도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Ⅲ. 국회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사례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합리적 지방비 부담구조 마련 등 개선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2025.6.) -

(1) 현 황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1차 추가경정예산에 4,000억원이 편성되었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6,000억원이 증액된 1조원이 편성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예산	2025			증 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0,000	-	400,000	1,000,000	600,000	150

자료: 행정안전부

(2) 분석의견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율이 지역별 특성(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되었으나 이에 비례하여 할인율도 상향 고정되어 자치단체의 부담은 동일한 구조로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는 발행규모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2025년 발행지원 규모는 13조 7,175억원 수준이며, 1차 추경을 통한 국비지원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발행액의 5%, 기타 지역은 발행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면 당해연도 국비지원분 발행규모는 약 2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발행규모	235,871	272,196	209,418	175,769	-[1]
지원분 발행규모	199,199	183,739	109,639	85,852	137,175[2]
국비예산규모	13,525	7,053	3,525	3,000	4,000

주: 1) 연도 중으로 전액 지방비를 활용한 발행규모는 확인이 어려움
2) 1차 추경을 통해 국비로 지원한 발행액의 잠정발행 규모임
자료: 행정안전부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6,000억원을 편성하여 발행 확대 및 할인율 인상을 견인하되, 지역별 재정여력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8%, 인구감소지역은 10%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비로 발행액의 최소 5%를 부담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율이 10%~15%가 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방비 부담을 통해 할인율을 인상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설계 내역]

구분	발행규모	국고보조액	할인율		
			국비지원	지방비부담 (최소)	계
불교부지역	0.5조원(6%)	109억원	2%	5%	7% 이상
수도권	2.8조원(29%)	1,206억원	5%	5%	10% 이상
비수도권	3.8조원(47%)	3,157억원	8%	5%	13% 이상
인구감소지역	1.5조원(18%)	1,528억원	10%	5%	15% 이상
계	8.1조원(100%)	6,000억원	-	-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력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사실상 발행규모 대비 지방비부담분 최소 비율은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다 재정 여력이 낮은 자치단체는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대응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실제 2024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J시와 B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응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일부를 반납했으며 이를 인근의 비인구감소지역인 C시와 O군이 재분배 받은 사례가 있다.

○ 이러한 경우 근접한 자치단체 중 재정여력이 보다 나은 지역은 발행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많은 국비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근접 지역의 소비를 흡수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재정여력이 보다 어려운 지역이 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재정여력이 있는 근접 지역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일괄적으로 지방비 부담율을 설정하기 보다 각 자치단체에서 정책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게 자율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차등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자치단체 부담률에 따라 지원율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둘째, 광역시에 속한 일부 구·군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지원 기준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현재는 광역시, 도 내 시·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율 상향 등에 따라 신규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는 2018년 66개에서 2020년 185개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190개로 증가하였다. 2025년 현재(5월말 기준)에도 전체 발행 지자체 수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6곳이 미발행 중이고 기초자치단체는 226곳 중 47곳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방자치단체 현황]

(단위: 개)

구분	발행	미발행	소계
광역자치단체	11	6	17
기초자치단체	179	47	226
합계	190	53	24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자치단체별 발행현황을 분석해보면 ① 광역권과 기초권 전체 발행 ② 광역권 발행, 기초권 일부 미발행 ③ 광역권 미발행, 기초권 전체 발행 ④ 광역권 미발행, 기초권 일부 미발행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어, 사실상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광역권·기초권 발행 현황('25.5월말 기준)]

지역명	광역자치단체	역내 기초자치단체	
		발행	미발행
서울	발행	서울 25개 전 자치구	-
부산	발행	동구, 남구	강서구, 금정구 등 14개 지자체
대구	발행	-	대구 9개 전 지자체
인천	발행	동구	강화군, 계양구 등 9개 지자체
광주	발행	-	광주 5개 전 자치구
대전	발행	중구	유성구, 대덕구 등 4개 지자체
울산	발행	-	울산 5개 전 자치구
세종	발행	-	-
경기	미발행	경기 28개 전 시·군	-
강원	발행	춘천, 원주 등 17개 지자체	양양
충북	미발행	충북 11개 전 시·군	-
충남	미발행	충남 15개 전 시·군	-
전북	미발행	전북 14개 전 시·군	-
전남	미발행	전남 22개 전 시·군	-
경북	미발행	경북 22개 전 시·군	-
경남	발행	경남 18개 전 시·군	-
제주	발행	-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다만,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국비지원 규모가 1조원으로 증가하고 국비지원율도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의 경우 8%, 이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율이 10%로 이전 사례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발행 자치단체에게 신규 발행을 검토할 유인이 될 수 있다.

○ 그런데 현행 지원체계(2025년 제1회 추경예산사업 기준)는 광역시의 경우 광역 본청을 기준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도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본청은 지원하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광역시에 속해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도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현재('25.6.20.) 부산 동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 제2회 추경(안)은 인구감소지역 대상 국비지원율이 10%로 해당 89개 지자체에서 발행 유인이 높을 수 있으나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제약이 있다. 이들 지역은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국비지원율 10%에 대응지방비를 편성하여 보다 높은 할인율로 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나 체류인구의 역내 소비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대구 군위군 등은 정부에서 인구구조와 재정력을 고려했을 때 다른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여건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행정체계 상 광역시 내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의 차별성이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 설계라고 보기 어렵다.

[인구감소지역 중 미발행 자치단체 현황]

구분	미발행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
수도권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비수도권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대구 군위군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한편, 강원도 양양군과 같이 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별도의 지원율이 산정되는 경우 신규 발행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례 제정, 발행계획 수립, 자금 관리 계정 설치 등과 같은 사전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가맹점 모집 및 관리체계 구축, 운용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금융기관 연계 등 기본 인프라와 부정유통 감시체계 확보, 지역 주민 대상 안내와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 발행 경험이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역내 발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구조의 보완책을 모색하고 신규 발행을 검토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셋째, 국고지원으로 할인율이 상향될 경우 부정유통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22~'24년) 일제단속 결과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면밀한 유통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024년과 2025년(5월말 기준)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5%의 할인율을 유지하면서 명절 기간 등 특정 기간에 할인율을 상향하거나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제1회 추경예산은 국비지원율이 기타 지역은 2%, 인구감소지역만 5%였고 이에 대응하여 할인율도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5~10%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지원율이 확대되어 할인율이 7~15%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등은 정해진 기간 동안 할인율이 15~20%이 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더해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방비 부담을 통해 할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하였다.

[구매·보유 한도 지침 및 할인율 변경 내역]

구분	기존	변경
(회당) 구매한도	• 70만원	• 200만원 이내 지자체 자율 결정
보유한도	• 150만원	• 200만원 이내 지자체 자율 결정
할인율	•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율 결정 가능 • 1회 추경 국비지원 발행분의 경우 일반지자체 7%, 인구감소지역 10% • 2회 추경 국비지원 발행분은 5~15% 예정 ※ 단, 지자체가 추가 지방비 부담을 통해 할인율 인상 가능 •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등 정해진 기간 동안 할인율 15~2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그런데 이같이 일시적으로 할인율이 상향되고 1인당 1회 구매한도가 높아지면 정책의도와 달리 일부에서는 부정유통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매년 2회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22~'24년)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 보면 제한업종에서의 사용이나 결제거부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부정수취와 불법환전의 경우 2022년 대대적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2023년 크게 감소 하였다가 2024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 한편 기타 유형은 매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가맹점 등록 업종 외 상품 판매, 재화나 서비스 구매 없는 선결제, 가맹점이 아닌 타 업종 대리결제, 상품권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품 (예: 담배, 주류, 복권 등) 판매, 가맹점 명의 대여 등의 부정거래가 해당한다. 이전에는 단순히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깡' 행위가 주를 이룬 반면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부정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새로운 유형의 부정유통이 증가하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일례로, 최근 금값 시세가 급등하면서 일부 할인율이 높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순금(골드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례가 확인되어 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2022~2024년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유형별 적발건수]

(단위: 건)

연도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기타	합계
2022	132	45	-	7	184
2023	48	14	48	84	194
2024	121	13	33	104	271

주: ① 부정수취·불법환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현금화하는 '깡' 행위, ② 제한업종: 상품권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상품권을 받은 경우, ③ 결제거부: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대우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 등록 업종 외 상품 판매, 선결제 및 외상값 일괄 결제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및 할인율 상향에 따라 부정거래 및 부정편익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사업계획 보완 및 중기부 역할의 명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2025.6) -

(1) 현 황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형 AI 전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재도약촉진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 본 사업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500억원이다. 본 사업은 대부분(498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 공모사업 운영 및 선발·평가 등을 위한 사업운영비 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에 별도로 설치될 AI 추진단을 전담조직으로 하여 수행될 예정이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A)	변경안(B)	(B-A)	(B-A)/A
재도약촉진	10,779	41,549	91,549	50,000	120.3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0	0	50,000	50,000	순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테크노파크(TP) 등 지역 혁신기관, 대학·출연연구소, AI 솔루션 개발기업, 수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 AI 사업단을 구성하면, 선정된 7개 지역의 사업단을 대상으로 각각 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60%, 지방비 및 자부담 40% 등이며, 이를 반영한 금년도 총 사업비는 국비 500억원을 포함해 총 833억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2025년 제2회 추경안 증액 세부 산출내역]

구분	본예산	제2회 추경안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편성되지 않음)	**7개 지역 AI 사업단** × 약 70억원 = 총 50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 **첫째,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체계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 본 사업은 지역 수준의 산업구조 인공지능(AI) 전환(AX)이 각 지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이를 지원· 보조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에 지원방향이나 지역별 방향성 등을 별도로 사전에 제한하지 않으며 지역이 자체적으로 수립· 제출한 AI 전환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평가하여 소요 사업비를 일부 매칭 부담하게 된다.

○ 다만, 본 사업은 지역별로 AI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별도의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대략적인 지원단가(지역당 70억원)와 국비 분담비율(60%), 지원 목표지역 수(7개 지역) 등을 제외한 구체적인 세부 지원 산업분야, 단가산정 근거 등 사업계획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문제가 있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특히 이는 기존 지역 단위의 AI 전환 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동안 지역 주도형 AI 전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일부 지원이 이뤄진바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산업 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AI 전문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실증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AI솔루션을 수요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되었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은 기존 2019년부터 구축된 전국 24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발전시켜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AX 실증산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단별로 AI 도입이 시급한 특화·전략 업종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AX 실증지원, 산단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되었으며 편성액은 400억원이다.

○ 위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지역특화산업,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을 AI 기술을 융합한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자체 및 산하기관, 지역 내 제조기업 등이 컨소시엄 등을 구축하여 사업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특징이 있다.

○ 특히 2025년부터 신규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의 경우, AI 솔루션 구축, GPU 등 AI 관련 연산 및 저장인프라 지원, 데이터 공유, 컨설팅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번 추경안에 따른 중기부 소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과 지원범위가 상당 부분 중첩된다.

[타 부처 소관 지역 주도형 AI 전환 관련 사업 현황]

구분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소관부처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내용	○ (실증랩 구축) 지역특화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처리 및 실증환경 제공 ○ (AI융합 솔루션 개발) 실증랩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로 AI솔루션 구축	○ (AX 인프라 구축) 연산 및 저장,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 등 구축 ○ (기업 AX 실증지원) 산단 입주기업 대상 AI 솔루션 실증과제 지원 ○ 기타 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등
선정방식	공모(광역지자체 컨소시엄 대상)	공모(스마트그린산단 컨소시엄 대상)
지원액	총 20개월 간, 개소당 18.66억원 이내 (지방비 매칭 8억원 이상 필요)	총 4년간, 개소당 140억원 지원 (지방비 매칭 56억원 이상 필요)
2025년 편성액	(2023년까지 수행)	400억원(제1회 추경)

자료: 각 부처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처럼 지금까지 지역 단위의 AI 전환사업이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관계에서 중기부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도적 방식의 AI 활용 산업 대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또한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그러한 방향 설정 없이 지역이 제안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사하여 지원한다는 기본적인 사업구조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 주도적 AI 산업전환에 필요한 지자체의 수요 파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역할 등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 **둘째,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이는 자본보조금의 제한된 용도를 감안하면 지원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용도에 적합한 집행비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사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소요되기 위한 자금이다. 따라서 자본보조금은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등 내구적 성격을 가진 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본적 경비에 집행되어야 한다.

○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본 사업은 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498억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의 비목으로 편성되었음에도 그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자본재적 성격을 띠지 않은 솔루션 개발 및 인력양성, 컨설팅 지원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에 대해서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인바, 이는 자본보조금의 편성 용도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원 예시]

분야	세부내용
AI 솔루션 개발·보급	지역 산업특성을 반영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지역 중소기업의 AI 솔루션 도입·활용, AI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산학연 연계 및 AI 인력양성	AI 산학협력 프로젝트 및 인력교류, 도메인 특화 AI 융합인력 양성·교육, 기업 재직자 AI 활용역량 강화, AI 전문인력 파견 등
학습 데이터 확보·공유	지역 중소기업의 데이터 확보·공유, 데이터 전문기업-수요 기업 연계, 지역 산업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 활용
AI 규제해소 및 대응	AI 규제 대응 컨설팅 및 법제 검토, AI 규제 특례 및 실증 지원, AI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사전 진단 서비스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이는 기본적으로 본 사업의 지원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원성격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보조사업의 지원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지원된 타 사업과의 중복추진 또는 지원 간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일부 경상적 성격의 지원수요가 일부 파악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감안하여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의 성격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실제 사업용도에 적합한 집행비목을 설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3. 5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2025.6.) –

가. 현 황

○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통해 숙박 · 영화관람 · 스포츠시설 · 미술전시 · 공연예술의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안에 이를 위한 비용 총 77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이 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기존에 추진 중이었던 숙박쿠폰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이다.

[2025년 제2회 추경안에 따른 5대 분야 할인쿠폰 사업 개요]

구 분	① 숙박쿠폰	② 영화관람	③ 스포츠시설	④ 미술전시	⑤ 공연예술	합 계
내용	1박당 2~3만원 할인	1회당 6천원 할인	어르신 (기초연금수급) 5만원 할인	1회당 3천원 할인	1회당 1만원 할인	-
인원	50만장	신규450만장	신규70만장	신규160만장	신규50만장	780만장
예산	147억원	271억원	260억원	49억원	51억원	778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2025.6.

○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국내 숙박상품 온라인 예약 시 할인권을 지원하여 내수활성화 및 지역관광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동 사업은 당초 2025년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및 5월에 민생안정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숙박할인권 지원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하여 계획액을 315억 8,0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25년 6월 국회에 제출된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숙박할인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하여 현 계획액 대비 146억 7,900만원이 증액된 462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수정	2025			증 감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국내관광 역량강화	86,171	42,780	81,860	105,439	23,579	28.8
국내관광 캠페인	37,466	8,194	39,774	54,453	14,679	36.9
숙박할인권 지원	25,495	-	31,580	46,259	14,679	46.5

주: '당초'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계획액, '현계획'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변경된 계획액(추경안의 국회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 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이미 상당한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증액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을 통해 추가 발행되는 숙박할인권 지원의 배포 및 사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은 국내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2020.5.26.)」을 계기로 2020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으며, 2020~202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계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 2020년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90억원이 반영되었고, 2021년에는 기금운용계획(본예산)에 4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도 이월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2020~2022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 내역]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계기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업계 회복 지원		
예산	290억원 (제3차 추경 기금변경)	419억원 (본예산)	- (이월예산 활용)
실집행	101억원	197억원	398억원
배포 및 사용기간	8.14.~8.20. / 11.4.~11.23. ※ 코로나19로 2차례(8.20. / 11.23.) 사업중지	(지역편) 11.1.~11.3. 배포, 11.9.~11.30. 사용 (전국편) 11.9.~12.23. 배포 및 사용	(전국편) 4.7.~5.8. 배포, 4.7.~6.6. 사용 (지역편) 6.7.~6.9. 배포, 6.7.~7.14. 사용 ※ 산불프로모션 병행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5.24.~5.27. 배포, 5.28.~6.30. 사용) (축제가는 달) 9.14.~9.30. 배포, 9.14.~10.31. 사용
쿠폰 종류	3만원권(7만원 초과), 2만원권(7만원 이하) * 업계 자부담 할인(1만원) 별도	3만원권(7만원 초과), 2만원권(7만원 이하) * 지역편 지자체 추가할인(2만원) 병행	3만원권(7만원 초과), 2만원권(7만원 이하) * 지역편 지자체 추가할인(2만원) 병행
배포목표	100만장	130만장	114만장
실제사용	52만장	78만장	110만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023년 및 2024년에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자체적으로 민생안정대책 및 경제정책방향 등을 발표하면서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숙박쿠폰 발행을 추진하였다.

○ 이에 2023년에는 여행가는 달 본예산 30억원 및 기금 자체변경 373억원을 통해 총 403억원 규모의 숙박할인권 발행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는 여행가는 달 본예산 27억원 및 기금 자체변경 255억원을 활용하여 총 282억원 규모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2023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 내역]

구 분	상·하반기		추석계기(9~10월)
	상반기(5~7월, 여행가는 달)	하반기(10~11월)	
계기	내수 활성화 대책 (2023.3.29.)		추석민생대책 (2023.8.31.)
예산	310억원 (여행가는 달 본예산 30억원, 기금변경 280억원)		93억원 (기금 변경)
실집행	402억원		
배포 및 사용기간	(상반기) 지역편 5.30.~6.1. 배포, 5.30.~7.14. 사용 전국편 6.2.~6.30. 배포, 6.2.~7.14. 사용 (하반기) 10.27.~11.24. 배포 및 사용		9.27.~10.15. 배포 및 사용
쿠폰 종류	3만원권(5만원 초과) * 지역편 지자체 추가할인(2만원) 병행		3만원권(5만원 초과)
배포목표	100만장		30만장
실제사용	130만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 내역]

구 분	설계기 및 3월 여행가는 달(2~3월)	6월 여행가는 달(6월)	추석계기(8월~)
계기	설민생안정대책 (2024.1.16.)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1.4.)	하반기경제정책방향(2024.7.3.), 추석민생안정대책(2024.8.28.)
예산	62억원 (여행가는 달 본예산 27, 기금변경 34)	72억원 (기금변경)	149억원 (기금변경)
실집행	281억원		
배포 및 사용기간	2.7~3.31 배포, 2.7~4.14 사용	(지역편) 5.28~5.30 배포, 5.28~7.14 사용 (전국편) 6.3~6.30 배포, 6.3~7.14 사용	8.27~11.17 배포, 9.9~11.24 사용
쿠폰 종류	3만원권(5만원 초과)	3만원권(7만원 이상), 2만원권(7만원 미만) * 지역편 지자체 추가할인(2만원) 병행	3만원권(7만원 이상), 2만원권(7만원 미만)
배포목표	20만장	25만장	50만장
실제사용	95만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025년에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정부가「관광시장 안정화 대책(2024.12.26.)」,「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2.)」,「설 민생안정대책(2025.1.9.)」등을 발표하면서 3차(3월 · 6월 · 10월)에 걸쳐 비수도권 숙박시설 할인쿠폰 100만장 배포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해 1월에 297억 8,000만원, 5월에 18억원을 증액하여 총 315억 8,000만원의 기금 자체변경을 완료하였다.

[2025년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목-세목 코드	
자체변경 (1.2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03	29,780	국내관광 역량강화	320-01	'25년 경제정책방향,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숙박할인권 지원
자체변경 (5.20.)	비통화금융기관예치	470-03	1,800	국내관광 역량강화	320-0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할인권 추가 지원
합 계			31,5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에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1차 숙박쿠폰 배포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목표였던 30만장 중 28.4만장이 배포 · 사용되었다. 6월 현재에는 1차 쿠폰 잔여분과 함께 지역특별기획편, 특별재난지역편 등을 포함한 총 41.6만장의 2차 숙박쿠폰 배포·사용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3차 쿠폰은 10월 황금연휴를 겨냥하여 9월 중순부터 발행될 예정이었다.

[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추진 계획(계획현액 기준)]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3월(여행가는달)</th><th colspan="3">6월(여행비수기)</th><th rowspan="2">10월(황금연휴)</th></tr>
<tr><th>지역특별기획편</th><th>본편</th><th>특별재난지역편</th></tr>
<tr><td colspan="2">계기</td><td colspan="5">관광시장 안정화 대책(2024.12.26.),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2.), 설 민생안정대책(2025.1.9.)</td></tr>
<tr><td colspan="2" rowspan="4">예산</td><td rowspan="4">8,952백만원</td><td colspan="3">14,342백만원 *3월 집행잔액(665백만원) 포함</td><td rowspan="4">8,951백만원</td></tr>
<tr><td colspan="3">할인권 14,065백만원</td></tr>
<tr><td>1,245백만원
(+지방비 매칭[1] 추가 830백만원)</td><td>8,220백만원
*3월 집행잔액 (665백만원) 포함</td><td>4,600백만원
*5월 기금변경분 (18억) 포함</td></tr>
<tr><td colspan="3">운영비 277백만원</td></tr>
<tr><td colspan="2">실집행</td><td>8,287백만원</td><td colspan="3">-</td><td>-</td></tr>
<tr><td rowspan="2">배포 목표</td><td>당초</td><td>30만장</td><td colspan="3">40만장</td><td>30만장</td></tr>
<tr><td>현재</td><td>실배포 28.4만장
(잔여 1.6만장)</td><td colspan="3">42만장</td><td>30만장</td></tr>
<tr><td colspan="2">대상지역</td><td>비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제외)</td><td>13개 시·도 (강원·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전남·전북·제주·충북·충남)</td><td>비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제외)</td><td>10개 지역 (산청·하동·안동·영덕·영양·의성·청송·울주·무안·광주광역시)</td><td>비수도권 지역 (서울·인천·경기 제외)</td></tr>
<tr><td colspan="2">배포기간</td><td>2.28.~4.6.</td><td>5.28.~5.30.</td><td>6.2.~7.17.</td><td>6.18.~7.17.</td><td rowspan="2">9월 중순 예정</td></tr>
<tr><td colspan="2">입실기간</td><td>2.28.~4.6.</td><td>6.5.~7.17.</td><td>6.5.~7.17.</td><td>6.18.~7.31.</td></tr>
<tr><td colspan="2">쿠폰 종류</td><td>- 3만원(7만원 이상) 27만장
- 2만원(7만원 미만) 3만장</td><td>- 5만원(7만원 이상) 4.15만장</td><td>- 3만원(7만원 이상) 25.45만장
- 2만원(7만원 미만) 2만장</td><td>- 5만원(7만원 이상) 8만장
- 3만원(7만원 미만) 2만장</td><td>- 3만원(7만원 이상) 27만장
- 2만원(7만원 미만) 3만장</td></tr>
<tr><td colspan="2">실제 사용</td><td>- 3만원(7만원 이상) 23.5만장
- 2만원(7만원 미만) 4.9만장</td><td colspan="3">-</td><td>-</td></tr>
</table>

주: 1) 5만원 할인권에 대해 국비 3만원, 지방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칭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더해 숙박할인권 50만장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할인권 지원금 145억원 및 사업 운영비 1억 7,900만원의 총 146억 7,900만원을 제2회 추경안에 증액 반영하였다.

[2025년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계획현액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금액
2025 계획현액 (기금 자체변경)	ㅇ 쿠폰지원(100만장) : 30,800백만원 - 본편 등: (82만장x3만원)+(8만장x2만원) - 특별재난지역편: (8만장x5만원)+(2만장x3만원) ㅇ 사업 운영비 780백만원	31,580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2회 추경안)	ㅇ 쿠폰지원(50만장) : 14,500백만원 - (45만장x3만원)+(5만장x2만원) ㅇ 사업 운영비 179백만원	14,679
합 계		46,25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러한 추경안을 반영할 경우 2025년 숙박할인권 배포량은 150만장으로 동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존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계획한 발행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경에 따른 증액 규모를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숙박할인권 배포 및 사용 현황]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현재	추경
배포목표	100만장	130만장	114만장	130만장	95만장	100만장	150만장
실제사용	52만장	78만장	110만장	130만장	95만장	(1차) 28.4만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추경안 반영 시 추가 발행되는 50만장의 배포 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9월 중순부터 추진 계획이었던 3차 숙박쿠폰 발행(10월 황금연휴)의 시기를 앞당겨 8월부터 12월까지 통합 배포 및 사용(30만장→80만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반영 시 2025년 3차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계획 변경(안)]

구분	당초(안)	변경(안)
배포 수량	30만장	80만장 (+50만장)
대상지역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기간	9월 중순 배포 예정	8월 중순 ~ 12월 중순 배포 및 사용 예정
할인권 종류 (숙박료 기준)	ㅇ3만원(7만원 이상) 27만장 ㅇ2만원(7만원 미만) 3만장	ㅇ3만원(7만원 이상) 72만장 ㅇ2만원(7만원 미만) 8만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는 기존에 숙박쿠폰 발행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배포 및 사용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하반기에 상시적으로 숙박쿠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바, 추경안 반영 시 숙박쿠폰 발행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 경우 숙박쿠폰 발행에 따른 국내 여행 수요 분산 효과(비수기나 특정 기간에 수요 유도) 및 단기간 내 내수진작 효과 등 정책의 체감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집행가능성 및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발행분의 배포 · 사용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 합리적인 방안 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 (2024년 결산 분석 / 2025.7.) -

가. 현 황

○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의 일부(47.5%)를 시·도교육청에 증액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2024년도 예산현액 9,438억 9,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4회계연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2025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고등학교 무상교육	943,898	-	-	943,898	943,898	100.0	-	-	5,267

자료: 교육부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4월 9일 당·정·청 협의로 확정·발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근거하는 의무지출 사업이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0년 고2·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해당하며,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다.

나. 분석의견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여건,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주체별 재원 분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 제14조에 근거하며,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별도의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47.5%를 조달하며,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하였다.
- 이러한 재원분담 비율은 제도 도입 당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는 한편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더해,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2020~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 재원 투입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1,357,325	1,986,388	1,914,415	1,900,444	1,981,255	1,950,893
국비	646,000	943,113	909,449	902,807	943,898	5,267[1]
시·도교육청	646,000	943,113	909,449	902,807	938,774	1,945,626[2]
지방비	65,325	100,162	95,517	94,830	98,583	-

주: 1) 그동안 운영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에 대한 정산분임
2) 최근 4년간(2021~2024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투입된 재원 규모를 통한 예측치임
자료: 교육부

- 다만,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2025년 이후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관련 특례조항이 일몰되기 전에 법령 개정 및 일몰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년 12월 31일부로 법정 시한이 만료되었고, 이에 교육부는 2025년 예산에서 그간 운영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에 대한 정산분인 52억 6,700만원만 편성하였다.
- 이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규정의 일몰로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비용은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 구체적인 재원 투입현황을 살펴보면,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2020년은 국비와 시·도교육청 자체재원이 각각 6,460억원, 지방자치단체에서 653억원 등 총 1조 3,57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조 9,456억원이 투입되었다.
- 그러나 증액교부금 지원 특례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에는 국비로는 기존에 운영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에 대한 정산분 예산 52억 6,700만원만이 편성되었고, 실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수입 등을 통해 확보된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1.9조원 가량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특례규정이 일몰되기 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지원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에 더해, 시·도교육청의 연차적인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감축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 이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과정을 거쳐 특례규정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대안발의, 의안번호 2205966)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었고, 2025년 5월말 현재까지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 시한 만료에 따라 기존의 국고부담분(47.5%)과 지자체부담분(5%)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고, 최근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별도의 증액교부금 없이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교육부는 법령 시한이 만료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한 국고 예산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은 가능하므로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주체간 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특성상 세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중 일부를 교부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등 최근 교부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더해, 한국교육개발원의 “2024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23회계연도)”(’24.11월)에 따르면,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경기둔화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로 2022년 23.41%에서 2023년 △2.45%로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된 상황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 받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통합재정수입의 확보는 어려운 반면, 인건비 호봉상승분,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환경개선시설사업 추진에 따라 통합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 따라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여건,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회